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第 6 次 會 議 會 議 錄

1992. 8

統 一 院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第 6 次 會 議 會 議 錄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1. 一 般 事 項

가. 日 時 : 1992. 7. 28(火), 10:00~13:00

나. 場 所 : 板門店 북측지역 『統一閣』

다. 參席者

구분	우 리 측	북 측
위원장	林東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김정우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위 원	金泰淵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宋榮大 (통일원 자문위원) 朴雲緒 (청와대 경제비서관) 柳得煥 (상공부 제1차관보) 辛鉉雄 (문화부 문화정책국장) 朴秀蒼 (총리실 정책심의관)	김채성 (정무원 사무국 부장) 손종철 (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류창석 (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 정덕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승국 (로동청년사 부주필) 김령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수행원	崔興植, 徐承一, 趙明均, 孫鍾洙, 李在浩, 金炳培	오풍근, 한영호, 김계익, 김창우, 김춘단, 신원철

會 議 錄

2. 會 議 錄

<雙方 委員 入場 및 人事 交換>

북(김정우) : 안녕하십니까 ?

남(임동원) : 오래간만입니다.

북(김정우) : 그 사이에 건강들 하셨습니까 ?

남(임동원) : 예, 한달만에 만나죠 ?

북(김정우) : 한달반까지는 안된 것 같아요.

남(임동원) : 아니, 한달.

북(김정우) : 한달 조금 ...

남(임동원) : 우리가 지난 달 26일에 만났던가요 ?

북(김정우) : 예, 아마 임선생이 좀 미국도 다니고 그런 것 같은데 워싱턴에서 무슨 한반도 세미나에 한 마디 강연을 했더라. 거기서 무슨 다른 전제 없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남(임동원) : 나는 뭐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지. (웃음)

북(김정우) : 그래요 ? (웃음)

남(임동원) : 우리 이번에 김인호위원이 승진을 해서 환경처차관으로 갔어요. 그 후임으로 김태연실장이 오늘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북(김정우) : 우리쪽에서도 위원 한명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문화예술부 국장으로 있던 김이순위원이 다른 부문으로 전용되었기 때문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김령성위원이 나왔습니다.

남(임동원) : 김령성위원은 뭐...

북(김정우) : 다 구면이지요?

남(임동원) : 환영합니다.

북(김령성) : 반갑습니다.

북(김정우) : 김태연실장이 그러니까 김인호실장이 보던...

남(임동원) : 그 일 그대로 보시게 됐어요.

북(김정우) : 아마 김인호선생이 회담 나와서 공적으로 쌓아서 차관으로 승급한 것 아니요 ?

남 · 북(일동) : (웃음) ...

남(임동원) : 우리 김정우위원장이 많이 도와준 모양이네요.

남 · 북(일동) : 웃음 ...

북(김정우) : 좌우간 회담자 성원에서 차관으로 승진했다고 하니까 인사 전해 주십시오, 축하를 한다고.

남(임동원) : 예.

북(김정우) : 그리고 김태연선생이 오늘부터 우리하고 같이 일하게 됐는데,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아 또 전공이 경제 같은데?

남(임동원) : 예, 경제예요. 경제분야에서 계속 일해 왔습니다.

북(김정우) : 경제분야에 밝으면 회담이 더 잘될 수 있습니다.

남(임동원) : 기대해 봅시다.

남(박운서) :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 분과가 제일 앞서가고 있지 않아요.

북(김정우) : 우리 분과가 ? 글썄 앞섰다고 보겠는지... 다른 데는 제목,

장, 뭐 조까지도 거의 합의본 데가 많아요.

남(임동원) : 그건 문제없어요.

북(김정우) : 그래요 ?

남(임동원) : 그건 큰 문제가 될 것 없지요.

북(김정우) : 내 임선생만 믿습니다, 그럼.

남(임동원) : 요전에 문안조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문제없다고 거기서 그랬는데, 문안조정이 문제없는데 제목 정하는 게 왜 문제가 있겠어요 ?

북(김정우) : 항상 그저 논리적으로, 일치적으로 하게 되면 다 일차 이차 하게 돼 있어요.

남(임동원) : 어디 비가 좀 왔어요, 북쪽에는 ?

북(김정우) : 요새 조금 많이 옵니다. 한 3~4일 동안 비가 많이 내렸는데, 어떤 날은 한 100mm 오고... 그쪽은 어떻습니까 ?

남(임동원) : 장마전선이 북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쪽은 이제 거의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쪽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중부지방에 좀 오고 지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 뭐 그렇게 집중폭우가 내렸다면 이런 것은 없이 적절한 양이 내린 것 같아요.

북(김정우) : 홍수 피해가 없습니까 ?

남(임동원) : 이번에는 전혀 없어요.

북(김정우) : 그럼 비 오지 않아서 모내기 못했던 것들도 마저 전부 다...

남(임동원) : 예, 다 해결되고, 아무 피해가 없고, 잘됐어요.

북(김정우) : 지금이 원래 장마기간입니다. 아마 8월 중순까지 장마가 계

속될 것 같아요.

남(박운서) : 금년에 장마는 일주일 늦게 왔어요. 6월 29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주 한 3~4일 정도 되면 다 끝날 것입니다.

남(임동원) :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고 지역에 따라 좀 오고 안오고 하는
데, 김달현부총리가 지난 주에 서울 다녀갔지 않습니까? 남쪽지방 쪽
여행을 하고 했는데 아주 장마비를 하나도 맞지 않고 어떻게 교묘하게
피해서 다니는지 (웃음) ...

북(김정우) : 원래 북쪽사람들이 남행할 때는 좋은 걸 좀 안고 다니니까
비도 피해 가지.

남(임동원) : 장마철에 비를 안맞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
러 군데 다니면서...

북(김정우) : 아마 합의서 리행을 위해서 좀 분발하니까 하늘도 도와주는
모양이요.

남(임동원) :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북(김정우) :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합의서 리행에 좀더 적극적인 것은 사
실인 모양이야.

남(임동원) : 다 적극적이지. 남쪽이나 북쪽이나 우리 교류·협력분과에서
적극적이라는 얘기에요, 『우리』라는 게... 나는 그날 우리 김정우위원장이
같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판문점까지 오고 뭐 오시지 못하
더구만.

북(김정우) : 판문점을 더 넘어가게 되면 임선생이 더 바빠질 것 같아서
(웃음) ...

남(임동원) : 나는 어차피 바쁜 몸이기 때문에 환영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달현부총리한테 왜 김정우위원장 같이 안모시고 왔느냐고 하니까, 같이 좀 올건데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 하더구만요. 판문점까지 왔다고 그러더군.

북(김정우) : 내가 안가도 임위원장이 한번 회담에 참가했더만, 최각규부총리 회담에...

남(임동원) : 두번 했어요, 오는 날하고 마지막에.

북(김정우) : 내 안갔어도 두번씩이나 회담에 참가했는데, 내가 가게 되면 또 전적으로 시간 빼앗기지 않아요 ?

남(임동원) : 아니, 섭섭하더라고...

남·북(일동) : (웃음) ...

북(김정우) : 한갑수차관도 바빴을 것 같고...

남(임동원) : 예, 바빴어요. 안내하고 뭐... 우리 김태연위원이 또 직접 관여해서 바빴지요.

북(김정우) : 이번에 경제기획원에서 국장 어느 분이 계속 안내...

남(임동원) : 예, 김태연위원 밑에 있는 국장이 계속해서 안내했습니다.

북(김정우) : 아, 김태연위원 밑에 있는 국장이...

남(임동원) : 남쪽에서는 지금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우리 코리아의 아주 나이 어린 딸이 올림픽의 첫 금메달을 먼저 땀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들 좋아하고 있어요. 여자공기소총에서 첫날 첫 경기에서 금메달을 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역도에서 또 하나 따서 금메달 두개가 되어서 대단히 좋아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북(김정우) : 원래 우리 민족은 슬기로운 민족이니까...

남(임동원) : 그럼, 그리고 우리 민족은 여자들이 우수한 것 같아요.

북(김정우) : 탁구도 잘하고...

남·북(일동) : (웃음) ...

남(임동원) : 남북 다 봐도 여자들이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북(김정우) : 우리한테도 김광숙이던가, 체조를 아주 잘하는 어린 처녀가 있고, 그 다음에 사격경기에서도 아주 이름있는 그러한 선수가 여성이예요.

남(임동원) : 좋은 성적들을 어디 기대해 봅시다.

북(김정우) : 이제 마지막에 다 남북의 금메달을 합치면 더 많아지는 그런 숫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임동원) : 그렇지요. 이것이 이제 남북이 따로 따로 출전하는 마지막 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이제 단일팀으로 나가야지.

북(김정우) : 아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남(임동원) : 김정우위원장 노력에 달려 있어요. 좀 열심히 합시다. (웃음)

북(김정우) :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건지, 자꾸 전제를 두려고 하는 그쪽 노력에 달려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다그쳐 봅시다.

남(임동원) : 그럼시다.

북(김정우) : 그럼 오늘 회담 시작할까요 ? 오늘 회담 어떻게 하십니까 ? 공개로 하십니까, 비공개로 하십니까 ?

남(임동원) : 그쪽에서 오늘 사회를 하니깐, 그쪽 원하시는 대로 동의하겠어요. 하시자는 대로...

북(김정우) : 그럼 공개로 합시다.

남(임동원) : 좋습니다. 사실 우리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제1차, 제2차 처음부터 공개로 했어요. 단지 3, 4차 때만 아마 우리 합의하에 비공개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수정안들 내가지고 진지하게 하려고 사실 그랬더랬는데, 5차 또 공개를 했고...

북(김정우) : 뭐 공개로 한다고 그래서 수정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아요.

남·북(일동) : (웃음) ...

남(임동원) : 사실 은근히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그 얘기가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남·북(일동) : (웃음) ...

북(김정우) : 먼저번에 임위원장선생이 『공개로 하는 것 보니까 또 이거 못믿을 거로구나.』 이랬는데 ...

남(임동원) : 내가 아주 적중했지. 딱 내가 적중했잖아요 ? 아무것도 안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오늘은 그렇지 않겠지요 ?

북(김정우) : 오늘 우리가 어떤 안을 들고 나왔는가 한번 들어 보시지요.

남(임동원) : 그럼시다.

북(김정우) : 제가 관례대로 먼저 좀 발언하겠습니다.

남(임동원) : 그러시죠.

<北側 基本發言>

남측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

오늘 우리는 쌍방이 북남합의서의 협력, 교류부문 부속합의서를 내놓기로 합의한 9월 5일까지 불과 한달남짓한 기일을 앞두고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 제6차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협력, 교류부문 부속합의서를 9월 5일까지 작성하는 것은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 합의사항이며 우리 쌍방이 다같이 민족앞에 그 리행을 확약한 엄숙한 서약입니다.

우리는 지난 5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와 4차례의 위원접촉을 통하여 쌍방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차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으며 부속합의서 작성에서 일정하게 진전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부속합의서의 구성체계를 하나로 일치 시킬 수 있었으며 내용면에서도 토의를 심화시켜 적지 않는 조항들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일부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쌍방이 다같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는 립장에 선다면 능히 타결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는 9월 5일까지 협력, 교류부문에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 회의결과에 많이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속합의서토의에 앞서 북과 남이 협력, 교류분과위원회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북남합의서를 리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쌍방은 어떠한

전제조건도 부치지 말아야 하며 그것으로 하여 합의서리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이 공동으로 시한부를 정해놓고 부속합의서를 토의하는 지금에 와서 어느 일방이 자기의 정략적 목적에 따라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걸고 민족앞에 공약한 합의날자를 어긴다면 부속합의서의 운명은 물론이고 모든 북남관계가 북남합의서채택이전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5차회의에서 귀측이 《핵문제》를 걸고 우리를 반대하여 벌리고 있는 소동을 중지할데 대하여 강하게 주장한 것이나 귀측 고위급 회담 대표가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 전에 부속합의서를 내놓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한 말을 문제시하고 그러한 립장을 철회할데 대하여 강하게 요구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회담장에 나와서는 북남합의서를 전제조건 없이 리행할 것이며 부속합의서도 약속한 기간내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여전히 있지도 않는 그누구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북남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는 엇갈린 립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한 그 어떤 북남관계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귀측의 종래의 립장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측은 결과 속이 다른 립장을 취하면서 더이상 회담 진전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려 할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내걸고 있는 전제조건을 지체

없이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북과 남의 인도주의적 문제해결에서 초점으로 되고 있는 리인모로인송환과 관련한 우리측의 견해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리인모로인송환문제는 해결을 기다리는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 문제로서 그 어떤 다른 문제와 연결시킬 수 없는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유감스럽게도 최근 이 문제를 그 어떤 정치적 흥정물로 리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귀측 《총리》는 우리측에 보낸 지난 7월 7일부 편지에서 리인모로인송환문제를 그 무슨 《랍북어민》, 《랍북인사》들의 《귀환, 정착》문제에 포함시켜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이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이 아닌 것입니다.

귀측은 북남관계의 현시점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리인모로인송환문제와 결부시킴으로써 그를 영원히 자기 고향으로 돌려 보내지 않으려는 속셈을 다시금 드러내 놓았습니다.

귀측이 들고나온 그 무슨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갈라진 사람들의 귀환, 정착》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북에는 본의 아니게 정착되어 사는 남조선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북에서 살것을 결심하고 이미 가정을 이루고 보람을 누리며 살고 있으며 남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자기의 처자가 있는 북으로 오겠다는 사람과 남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교환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더 논의할 여지조차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귀측이 이러한 문제들을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
결하자고 주장한 것은 새로운 논쟁점을 만들어 부속합의서 토의를 지연
시키자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보면 적십자단체들의 권능까지 침
해하는 엄중한 결과까지 초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귀측이 실지로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사
가 있다면 리인모로인을 그어떤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로부
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이전에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자기 처자가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로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에 대한 귀측의 태도문제입니
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로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은 북남합의서리행의 첫선물로서 흠어
진 가족, 친척들과 온 겨레에게는 상봉의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나아가
서는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주는
뜻깊은 계기로 될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측은 방문단교환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적십자단체들의 실무대표접촉 과정을 중
합해보면 방문단교환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접촉이 시작된 초기에 이미 량해각서에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일치가 되어있는 조건에서 한두차례 접촉이면 방문단교환절차

가 쉽게 타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접촉초기부터 량해각서에 없는 문제들을 새로 넣거나 쌍방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들고 나옴으로써 실무토의를 예상외로 지연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귀측의 그러한 태도를 심중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귀측이 핵문제와 리인모로인송환문제, 더우기는 《포커스랜스》군사연습을 방문단교환사업과 일치시킴으로써 전반적인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귀당국의 전략에 방문단교환사업도 포함시키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문제를 걸고 모든 북남관계를 차단하는 것이나 방문단교환사업과 통일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한 리인모로인의 송환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방문단교환사업과 량립될 수 없는 《포커스랜스》군사연습을 벌리려는 그 자체가 결국에 있어서는 모든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방문단교환사업도 뒤로 미루거나 성사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측의 이러한 의도는 지난 7월 26일 귀측이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전략기획단체회의》를 열고 《리산가족교환방문단사업시기를 10월초로 연기》하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세운데서도 더욱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당국이 진심으로 방문단교환사업을 성사시킬 의사가 있다면 우리측이 제기한대로 방문단교환사업앞에 가로막은 세가지 장애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방문단교환이 순조롭게 해결되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나는 우리 협력, 교류분과위원회사업과 직결되어 있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측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

우리 협력, 교류분과위원회가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전에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자면 지금 서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지금 쌍방부속합의서안의 차이점들을 보면 근본립장상 차이로부터 오는 심각한 문제들도 있고 이해상 차이로부터 오는 부차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가운데서 특히 귀측안에만 있는 경제협력, 교류당사자의 당국승인문제와 우리의 안에만 있는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에 따라 교통로를 개설하는 문제,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 그리고 인도적 문제는 부속합의서를 제 기한내에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관건적 고리로 되는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회담들에서 우리 부속합의서안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려고 합니다.

제1장 경제협력교류부분에서 귀측의 안에만 있는 경제협력교류당사자에 대한 당국승인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귀측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북남간에 처음 하는 일이고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당국의 책임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금동원능력과 경험,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격이 있는자만이 참가하게 함으로써 거래당사자들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당국승인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회의들에서 귀측의 주장을 분석하면서 거래당사자의 참가 자격은 거래은행이 더 잘안다는 것, 협력교류당사자도 당국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에 선정한다는 것, 협력교류참가대상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당국승인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대상제한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 귀측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귀측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론거들을 만들어내던 나머지 지금에 와서는 귀측자체내에서까지 모순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측은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부속합의서 제4장 9조에 《남과 북은 비방중상중지의 행위주체를 쌍방국가기관과 집권정당 및 공영언론기관을 포함한 공공단체로 한다》고 명기하면서 민영언론기관의 비방중상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귀측이 말하는대로 《자유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민영언론기관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 언론보도기관보다 대비할 수 없으리만큼 보다 더 사유화되어 있는 민영경제업체들은 통제하겠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귀측은 민영언론기관을 통제 못하는 원인을 헌법에 위반되기때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영기업통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가 하는 것입니다.

길게 말할것도 없이 이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귀측이 지금 자기의
정략에 맞으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건 맞지 않건 관계없이 자기의 주장
을 고집해나서고 자기의 정략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무조건 배제하려는 그릇된 립장에서 부속합의서토의를 대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측은 자기의 이러한 부당한 주장이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배치되
고 실천적으로는 북남협력, 교류가 기본합의서대로 원활히 리행될 수 없
게 만든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자기의 그릇된 주장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제기한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교통로를
개설하는 문제입니다.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됨이 없이 방대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군
사분계선상에 완전한 교통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군사인원들을 내놓고는 그 류동이 제한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정상적인 '교통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사실입니
다.

그리고 기술실무적으로 볼 때에도 철도와 도로를 개설운영하자면 중계
역도 건설하고 차량검사소, 연유공급시설, 검역소 등 수많은 시설들을 전
개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현 상태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래왕과 물자

거래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그래서 우리안에 립시교통로 개설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립시교통로문제와 관련하여 귀측이 장애물이 없는 공로도 열수 있지 않는가고 제기하고 있는데 항공로야말로 지상보다도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그쪽에서는 지난 시기 체험을 통하여서도 잘 알것입니다.

군사적 대결이 없이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도 항공로에서 뜻하지 않은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하물며 방대한 군사력이 대치되어 있고 긴장상태가 가셔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과 남의 항공로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더말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귀측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고 인정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우리의 안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 제2장 사회문화협력, 교류부문에서 우리가 제기한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귀측이 협력, 교류분과위원회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의 립장을 옳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은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가 협력, 교류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에 저촉되는 법철폐문제를 론의하자는 것이지 북남전반에 관계되는 법을 론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래왕을 하자면 그를 구속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철폐되어야 하

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또 자유래왕문제가 우리 협력, 교류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인것만큼 그 실현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를 우리 분과위원회가 논의하는 것은 옹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어느 일방에만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쌍방이 다 검토하고 그러한 법이 있으면 다같이 고치자는 것입니다.

북남합의서가 리행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에 맞게 낡은 대결시대의 법적제도적장치들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또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귀족 정계, 사회계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귀족이 굳이 반대하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장치철폐문제를 협력, 교류분과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려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분과위원회들이 해당한 문제들을 부속합의서에 과제로 명백히 담아놓은 다음에 실천단계에 가서 그 구체적 협의실천은 고위급회담의 위임에 따라 해당 공동위원회가 해결하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부속합의서는 그 어떤 한갓 선언이 아니라 발효되면 실천에 들어갈 수 있는 실천합의서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옹당 합의서의 모든 조문들이 현실과 결부되어 실천에서 장애로 될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를 극복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속합의서에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많이 합의하여 놓아도 북남 협력, 교류사업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장치철폐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부속합의서는 한갓 지상공문으로 남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온 민족이 요구하고 협력교류의 원활한 실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3장 인도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쌍방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당국이 맡아 해결하겠는가 아니면 전담기관인 적십자단체들에 넘겨 해결하겠는가 또 부속합의서에 인도적 문제의 해결대책을 어느정도로 구체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측의 주장을 보면 인도적 문제를 당국이 주관하여 해결하자는 것이고 실천단계에 가거나 상정될 세부적인 문제들까지 부속합의서에 넣자는 것인데 우리는 귀측의 그러한 주장이 부속합의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으며 적십자의 원칙을 무시하고 적십자단체들의 권능까지 침해하는 주장이라는데 대해서 지난 회의들에서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귀측이 자기의 그릇된 주장을 양보하지 않고 있고 시일적으로도 촉박한 형편에서 한정없이 시간을 끌어갈 수 없는 점들을 심중히 고려하여 지난시기 우리가 내놓은 안이 인도적 문제를 쉽고도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안이라고 인정하지만 어떻게 하나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전에 부속합의서를 완성하려는 일념에서 부속합의서의 제3장 인도적 문제를 대폭 수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내놓으려는 수정안은 인도적 문제를 전담기관인 적십자단체에 넘겨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북남합의서 제3장 18조에 기초하여 귀측의 안도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쌍방합의서안의 기타 차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간을 앞당겨 제기한내에 부속합의서를 완성하려는 립장에서 일부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새롭게 만든 우리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협력, 교류

— 제목에서 북남을 떼어 경제협력, 교류라고 했습니다.

제1조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①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석탄, 유색 및 희유금속광물, 수산자원 등에 대한 공동개발을 진행한다.

②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관광을 비롯한 각분야의 합

영, 합작 대상과 물자교류품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방향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토의하여 정한다.

③ 자원의 공동개발, 공업, 농업, 건설, 관광을 비롯한 각 분야의 합영, 합작 형식과 규모, 물자교류의 량과 지불조건 등은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 따라 정한다.

④ 물자거래에서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⑤ 북과 남사이의 물자교류는 호상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⑥ 북과 남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쌍방 거래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도 취할 수 있다.

⑦ 북과 남은 물자교류에서 청산결제를 맡아 수행하기 위한 은행들을 정하며 결제업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지정된 은행들이 토의하여 해결한다.

⑧ 북과 남사이의 결제화폐는 스위스프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전환성 화폐로도 할수 있다.

⑨ 북과 남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북남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 추진한다.

— 그쪽 안을 받아서 수정한 것입니다.

⑩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수 있다.

⑪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 공업규격 등을 서로 교환하며 협력, 교류 당사자가 지켜야 할 자기측의 해당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자본의 이동,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북과 남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협력과 교류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 여기서도 그쪽 안을 감안해서 수정했습니다.

⑭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 북과 남은 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① 북과 남은 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연구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존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북과 남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등 상대측의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와 공로를 개설한다.

① 북과 남은 우선 남포항과 인천항, 원산항과 부산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직접 수송문제는 다음 조항으로 넘겼습니다.

② 북과 남은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경의선철도와 개성-문산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고 순안비행장과 김포공항 사이의 공로를 개설한다.

③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경제 협력과 교류 및 인원래왕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육로, 해로, 공로를 추가로 연결하여 개설한다.

- 새로 추가한 조항입니다.

④ 북과 남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물자교류와 인원래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⑤ 북과 남은 육로, 해로, 공로 개설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⑥ 북과 남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공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새로 추가한 조항입니다.

⑦ 북과 남은 교통로 연결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새로 추가한 조항입니다.

⑧ 북과 남은 북남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운행방법, 통과지점선정 등 교통로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 수정한 조항입니다.

제4조 북과남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북과 남은 빠른 시일안에 우편과 전기통신을 판문점을 통하여 교환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 보장에서 당면하여 공적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리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북과 남은 북남사이에 교류되는 우편물과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수정한 조항입니다.

④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이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지 않는다.

⑤ 북과 남은 우편 및 전기통신 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새로 추가한 조항입니다.

⑥ 북과 남사이의 우편물과 전기통신 교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우편물 및 전화교환실 설치문제를 비롯한 제반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북과 남은 국제경제의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북과 남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북과 남은 경제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보장한다.

제 2 장 사회문화협력, 교류

- 여기서도 북남을 떼고 사회문화협력, 교류라고 했습니다.

제7조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존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협력, 교류를 실현한다.

①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정보자료를 호상 교환한다.

②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수정한 조항입니다.

③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의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연계와 교류를 실현한다.

④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민족의 리익을 위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 수정한 조항입니다.

⑤ 북과 남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출판, 건축, 사진을 비롯한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수정한 조항입니다.

제8조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① 북과 남은 사상과 정견, 신앙과 소속, 거주지와 과거여하에 관계 없이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래왕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수정한 조항입니다. 그쪽에서 각계각층이란 말을 하도 싫어해서 민족구성원이라고 했습니다.

② 상대측 지역에 대한 래왕은 우선 판문점을 통하여 하며 점차적으로 모든 통로(국제공로포함)로 하도록 한다.

③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한다.

④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며 래왕자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⑤ 북과 남은 래왕자들이 상대측 법과 사회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래왕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⑥ 북과 남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래왕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제반절차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보장한다.

제 3 장 인도적문제의 해결

— 여기서도 역시 제목에서는 북남이 없습니다.

제11조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래왕과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범위는 쌍방적십자단체들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게 원래 분과위원회 직무는 아닌데 하도 방계 8촌 뭐 처 외가 4촌 자꾸 넣자고 해서 이 규모를 지적합니다.

②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래왕과 방문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래왕절차에 따라 실현하도록 한다.

— 새로 추가했습니다

③ 쌍방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 새로 추가했습니다.

④ 쌍방은 인도주의정신과 동포애에 립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 친척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 새로 추가했습니다.

⑤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법적, 제도적, 물질적 조건을 보장한다.

⑥ 이 합의서의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분 조항들의 리행을 쌍방적십자단체들이 주관하도록 한다.

— 수정·발효 부문에서 위로 올라 왔습니다. 기타는 같습니다.

⑦ 북과 남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4 장 리행기구 및 수정, 발효

제12조 이 합의서의 《제1장 경제협력, 교류》의 리행은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제2장 사회문화협력, 교류》의 리행은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맡아한다.

제13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1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표 단 수석 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이상이 우리의 수정안입니다.

우리의 수정안은 북남기본합의서에 충실하면서도 귀측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이제 한두 차례 문안정리만하면 거래앞에 어느모로 보나 손색이 없는 부속합의서를 내놓을 수 있는 합리적인 안입니다.

이제 문제는 귀측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귀측이 거래당사자들의 당국승인문제를 비롯한 불필요한 조항들만 철회하면 별문제가 없이 해결되리라고 인정하면서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제5차회의에서 우리측이 긴급 제안으로 내놓은바 있는 대일공동대처결의안 문제입니다.

다아는바와 같이 일제가 구조선과 《체결》하였다고 한 《을사5조약》, 《정미7조약》과 그리고 그후의 48건의 《칙령》들은 황제의 인허와 수결, 국제날인도 받지 않은 날조된 가짜문서였다는 것이 최근 북과 남의 력사 학자들이 발굴한 사실자료들에 의해 다시한번 맹백히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고 인간이하의 갖은 천대를 받다 못해 심지어는 《종군위안부》로까지 끌려다니며 노예살이를 강요당한 거래의 분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온민족이 요구하는대로 일제에 의하여 왜곡날조

된 역사를 바로 잡고 일제가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모든 죄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기 위하여 북과 남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측은 이 문제를 앞으로 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북남역사학자토론회를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극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회피하는 것으로서 누가 보아도 결코 옳은 처사라고 볼수 없습니다.

민족의 존엄을 되찾고 잘못된 민족사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있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진정으로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왜곡날조된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제의에 귀를 기울이고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는 오늘 회의가 이상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여 합의서 리행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부속합의서를 제 기한내에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기본발언을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임동원) : 자, 수고하셨습니다. 귀측이 오늘 수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부속합의서를 조속히 완성하려 하는 자세를 보여준 데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 회의가 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제 첫 발언문부터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리側 첫 發言>

김정우 위원장

그리고 북측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지난 3월 18일 첫 회의를 가진 이래 오늘로서 네달이 넘는 시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우리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분과위원회 회의 5번, 위원장접촉 1번, 그리고 위원접촉 4번 등 모두 10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협의과정에서 다소의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우리는 적지 않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과위원회 회의를 처음 시작할 무렵만 해도 부속합의서의 수를 비롯하여 그 내용, 구성체계는 물론 공동위원회의 수와 기능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에서 견해의 차이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쌍방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고 통일을 앞당기려는 신념을 갖고 서로 노력한 결과 그 견해차이를 크게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

서』를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발효시키고 이산가족 노부모방문 단사업을 남북기본합의서의 첫 선물로 거래 앞에 내놓기로 합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속합의서 작성에 있어서도 쌍방이 각각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시를 통해 절충을 벌임으로써, 부속합의서 구성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견해일치를 보고 내용면에서도 몇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일치를 보았거나 절충이 가능한 상태로 접근되었습니다.

우리측은 이와 같은 토의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제5차 회의에서는 부속합의서 작성을 앞당겨 이 달 안에, 즉 7월 안에 끝내고자 하는 입장에서 귀측 주장을 수용한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고 절충과 합의를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부속합의서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부속합의서 토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귀측의 태도로 인해 지난 제5차 회의가 공전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 당국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서울에서 만나 경제교류·협력문제 등을 논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귀측 부총리의 방문이 남북간에 경제교류·협력의 길을 넓혀 나가는 데서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의 토의에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시한은 앞으로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유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그동안 양측이 의견접근을 본 사항과 아직 의견차이가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차이점 타결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부속합의서의 형식과 관련하여 쌍방은 각 분야를 장으로 나눠 편성한 단일 부속합의서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으며, 과학·기술, 환경과 교통로 연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경제분야에 포함시키고, 인적왕래와 보건을 사회문화분야에 포함시킨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조항 수에 있어서도 쌍방안은 거의 근접돼 있습니다.

부속합의서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세부적인 문안정리를 남겨놓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쌍방안이 거의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 교류물자의 가격을 국제시장가격으로 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등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경제교류·협력에 필요한 각종자료와 공업규격을 교환하며 관련법규를 상호 통보한다.
-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측의 특허권, 상표권 등 과학기술상

의 권리를 보호한다.

- 쌍방은 판문점을 통해 우편물을 교환한다.
- 또한 교통로 연결에 있어 일단 해로와 임시교통로의 개설에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분야에서는

- 쌍방이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정보자료의 교환, 사회문화 관련기관과 단체, 인원간의 상호 교류, 공동연구·조사, 편찬사업, 전시회 등을 실시한다.
- 상대측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기 위하여 왕래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며, 왕래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또한 쌍방은 경제, 사회문화분야의 국제기구와 국제행사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하는 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쌍방이 문안정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쌍방간에 의견차이가 남아 있는 조항으로는 이미 본분과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되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김위원장께서도 지적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측이 제기하는 것으로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승인』 문제가 있으며, 귀측이 제기하는 사항으로는 『인적왕래와 접촉에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와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통로 연결을 연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쌍방은 그 해결 주체와 부속합의서에 답을 구체적 대책에 대해 의견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귀측의 수정안을 보면 상당히 접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이러한 차이점들도 쌍방이 남은 기간동안 지금까지 쌓아온 상호 이해에 기초해서 호양의 정신으로 협의에 임한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오늘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쌍방은 부속합의서 논의에 집중함으로써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인식에서 부속합의서에 대한 우리측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속합의서의 명칭에 관해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로 하자는 귀측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속합의서의 전문도 이미 쌍방안이 거의 같습시다만, 이렇게 제의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로 한다면 완전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속합의서의 각 『장』의 제목에 관해서는 쌍방안을 조정하여 제1

장 남북경제교류·협력, 여기서 귀측이 지금 『남북』이란 말을 빼고 우리 측이 주장하던 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경제교류·협력』으로 제의합니다. 큰 제목이 『남북』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매장에 넣을 필요가 없이 좋다고 봅니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귀측안과 같습니다. 제3장은 인도적 사업의 실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4장은 수정·발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부속합의서의 이행기구 조항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쌍방안을 보면 경제분야는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사회문화분야는 사회문화공동위원회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인도적 문제의 이행은 쌍방 적십자단체에 위임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우리측안은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장』에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귀측안은 이것을 별도의 『장』에 한데 묶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쌍방이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켜 공동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굳이 부속합의서에 이행기구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보며, 더구나 성격이 전혀 다른 수정·발효를 규제하는 장에 묶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형식면에서도 해당하는 『장』에 이행기구를 명시하는 것이 각 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행기구 문제는 우리측 조항을 토대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부속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상호 견해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측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승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동안 매 회의 때마다 우리측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긴 설명은 필요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승인제도의 취지가 어디까지나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상호 신뢰와 책임성의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확대·발전되도록 하자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귀측도 합영법에 대외합영의 경우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우리측도 관계법률 등에 의해 필요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호 존중하고 이를 확인함으로써 경제교류·협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남북간의 경제체제가 현저히 다르고 또 서로의 경제사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당사자가 안심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이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귀측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귀측이 주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 문제입니다.

우리측은 남북 쌍방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올바르게 이행·준수하기 위한 출발점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곧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이한 법질서를 행동으로 존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측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는 마땅히 상호주의 원칙하에 협의·해결해야 하고, 그것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설치할 실무협회의의 하나로서 『법률실무협회의』의 구성 원칙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그에 앞서 상호 법률실태 파악을 위해 법에 관한 문건목록을 교환·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쌍방의 노력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준수 및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문제를 원만히 조정·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 서야 하며 『법적·제도적 장치철폐』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속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아직도 쌍방 입장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남북이산가족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안에서의 근본 차이점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주체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과 북의 책임있는 당국입니다.

우리 쌍방 당국은 이 합의사항을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행·준

다음으로 나는 부속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상호 견해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측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승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동안 매 회의 때마다 우리측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긴 설명은 필요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승인제도의 취지가 어디까지나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상호 신뢰와 책임성의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확대·발전되도록 하자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귀측도 합영법에 대외합영의 경우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우리측도 관계법률 등에 의해 필요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호 존중하고 이를 확인함으로써 경제교류·협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남북간의 경제체제가 현저히 다르고 또 서로의 경제사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당사자가 안심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이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귀측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귀측이 주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철폐』 문제입니다.

우리측은 남북 쌍방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올바르게 이행·준수하기 위한 출발점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곧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이한 법질서를 행동으로 존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측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는 마땅히 상호주의 원칙하에 협의·해결해야 하고, 그것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설치할 실무협의회의 하나로서 『법률실무협의회』의 구성 원칙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그에 앞서 상호 법률실태 파악을 위해 법에 관한 문건목록을 교환·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쌍방의 노력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준수 및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문제를 원만히 조정·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 서야 하며 『법적·제도적 장치철폐』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속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아직도 쌍방 입장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남북이산가족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안에서의 근본 차이점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주체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과 북의 책임있는 당국입니다.

우리 쌍방 당국은 이 합의사항을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행·준

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 누군가 이 명명백백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려 한다면 그는 쌍방 당국이 7천만 거래 앞에 서약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고의적으로 변질시켜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쌍방 당국이 제18조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합의서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엄숙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측 부속합의서안 중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그 내용면에서 남북합의서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합리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측 제안에는 과거 적십자회담시 쌍방간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사항들이 대폭 반영되어 있고, 최근 귀측 당국이 이산가족문제에 관해 관심을 나타낸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안 자체로서 20여년간 끌어오던 이산가족문제를 일괄 타결지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측은 우리측안에 대해 당국이 적십자단체의 권능을 침해하느니, 또는 극히 세부적인 조항까지 내놓아 토의에 『복잡성』을 조성하느니 하는 주장만을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우리측은 이와 같은 귀측 논리가 남북기본합의서와 국제적십자원칙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특히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관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만을 담고 있는 우리측 제안에 대한 『복잡성』을 내세워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은 인도적 문제에 관한 귀측 의지를 의심케 하

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며 매듭짓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귀측에서 오늘 몇 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측안과 유사한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넷째, 부속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쌍방 입장에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귀측이 주장하는 교통로 개설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의 연계 문제였습니다.

우리측은 이 문제에 관한 견해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제5차 회의에서 2단계 통행로 및 임시교통로 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귀측 주장과 최근의 남북관계 발전상황 그리고 교류·협력에 관한 거래의 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귀측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우리 쌍방 당국은 지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7개 사항에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하여 내외에 발표한 이 7개항중 6개항은 이미 그 이행을 완료했거나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을 비롯한 7천만 거래의 관심과 기대가 크게 모아지고 있는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교환사업은 그동안 귀측이

주장해온 전제조건으로 말미암아 합의된 날짜에 실현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남과 북의 동포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커다란 실망과 우려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은 우리 쌍방 당국이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첫 가시적 성과로 거래 앞에 내놓은 선물입니다.

특히 귀측은, 이산가족 방문단 사업에 합의할 때 여기에 전제조건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에서 이산가족 방문단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구실로 방문단 실무절차문제 타결을 지연시킴으로써 쌍방 간에 합의된 날짜에 방문단 명단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귀측의 태도가 방문단 명단교환 날짜에 관한 쌍방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단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들중 우선 제한된 일부 인원에게나마 그 고통과 눈물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인도적 정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산가족 방문단 사업이 정치적 목적의 희생물로 되어서는 결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방문단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문

제들을 내세워 방문단 교환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이 점을 심사숙고하여 지금이라도 전제조건을 철회함으로써 방문단 교환사업이 합의된 날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속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부속합의서 내용 중 몇가지 문제에 관한 견해차이를 좁혀 반드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훌륭히 해결하여 약속된 기한내에 부속합의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호양의 정신을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발휘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쌍방이 이러한 정신을 갖고 오늘로 부속합의서 내용토의를 대체로 끝내고 문안조정을 위한 위원접촉에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접촉은 다음주부터 시작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7차 남북 교류·협력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부속합의서가 가서명되고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를 서명·발효시키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북(김정우) : 수고했습니다.

남(임동원) : 첫 발언문에 이어서 귀측의 기본발언과 관련해서 간단히 논평을 하고 그리고 부속합의서안의 검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몇가지 문제점 중에서 첫째로 전제조건을 전혀 달지 말라 하는 문젠데, 전제조건을 전혀 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합니다. 단지 핵문제를 가지고 전제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이것은 명백히했습니다. 다만 핵문제의 해결이 없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제대로 잘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에도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두번째 노부모방문단 교환문제는 귀측에서 세가지 전제조건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장애를 내걸고 있는데, 이것을 철회하고 남북간에 합의된 대로 합의된 날짜에 노부모방문단을 교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안될 때는 우리 거래들을 크게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까봐 대단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적십자접촉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김위원장께서도 7월 26일 우리측이 전략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시기를 10월초로 연기하는 입장을 세웠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한 것입니다. MBC텔레비전이 이것을 7월 24일 밤 9시뉴스에 보도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마 기독교방송이 그것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기자가 전혀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추측보도해서 정부에서 문화방송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정정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통일원차관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고 연기하는 입장을 정했다 하는 보도가 나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회의한 것은 오늘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전적으로 오보를, 자꾸 언론기관에 책임을 미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오보였었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 큰 오보였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봤습니다. 문화방송이 어떻게 호응해 올런지는 또 두고 봐야 하겠지만 사실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약속된 날짜에 실시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측은 세 가지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첫째는 핵문제, 핵소동을 벌이지 말라 하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전제조건입니다. 그 입장은 우리가 누누히 밝혀 왔습니다. 너무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아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이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인모 송환문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7일자로 우리측 정원식총리가 귀측 총리한테 보낸 서신에 해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귀측의 호의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어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포커스렌즈 군사연습을 또 운위하고 있는데, 이 포커스렌즈라는 훈련은, 무려 20여년 동안 실시해온 도상훈련입니다. 실제 병력이나 장비가 동원되지 않는 훈련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귀측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과거 대표회의에서도 여러번 나왔던 애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사연습은 보통 서너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기동훈련, 기동훈련이라는 것은 실제병력과 장비가 참가하는 훈련입니다. 팀스피리트훈련이 바로 기동훈련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휘소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휘관들만 모여서 하는 훈련이에요. 병력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장비가 동원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도상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도 위에서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휘관이나 참모들만 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기동훈련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피한다는 것은 우리 겨레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정우위원장께서 잘 심사숙고해서 상부에 좀 건의해 주고 이 문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산가족방문단문제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겨레를 실망시키지 말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논쟁하지 않도록 합시다. 부속합의서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귀측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환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많이 우리 양측 안을 접근시키려고 하는 성의와 노력이 엿보이기 때문에 평가를 합니다. 물론 몇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아직도 있고 또 인도문제에 있어서만 해도 얼핏 보니까 서신교환이라든가 면회소 설치 같은 것은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이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토의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부속합의서안이 몇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근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서부터 제가 먼저 한번 우리 부속합의서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훑어 내려가면서 어떤 데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겠느냐? 물론 거기에 앞서서 제가 제의한 명칭과 전문과 각장의 이름이라든가 이것은 오늘 다 합의합시다. 그리고 대충 전반적인 것을 훑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내주에 위원접촉에 들어가서 문안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접촉을 몇번 해야 되겠죠. 몇번 하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필요하다면 위원장접촉을 해도 좋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안정리를 완료하도록 해서 다른 분과위원회에 우리 모범을 좀 보입시다. 이것이 제 제안입니다.

북(김정우) : 모범을 보이자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임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임위원장이 준비한 발언과 그 다음에 이야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기본발언에서 이제 지난 5차 회담 때 부속합의서와 관련 없는

문제들을 논의해서 공전시켰다... 그 책임이 마치 우리측에 있는 것처럼 발언이 됐는데 이걸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차 회담 때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 기본원인이 귀측의 발언의 무책임성으로부터 초래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미 5차 때 다 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당국승인문제,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 리산가족문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견해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합의서 토론과정에 우리의 립장이 표명되었기 때문에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리산가족 로부모방문단·예술단 교환문젠데, 우리가 전제조건을 내놓았기 때문에 지금 7개 항목 6개 항목은 실현되어 나가고 있거나 실현되었고 오직 이거 하나만 실현 못되고 있다, 그 다음에 7차 고위급 회담 때 전제조건 없이 하자고 했는데 왜 전제조건을 붙이느냐 하는 문제를 기본발언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7차 고위급 회담 때 임선생과 내가 앉아서 합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좀 똑똑이 우리의 립장과 그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선생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7차 북남고위급 회담 합의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하고 그 아래 7가지를 합의하였습니다. 그중에 다섯번째가 바로 리산가족 로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입니다.

그런데 임선생은 대부분 6가지는 리행되고 있거나 실현되었다 했는

데, 그렇게 되면 실지로 그쪽에서 지금 부속합의서에 대한 관점과 입장, 합의서 리행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어떤가? 그쪽에서는 지금 회담탁에 나와서는 전제조건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내가 명백히 말한다, 이렇게 이야길 하고 회담탁 밖에서는 돌아앉아서 딴 소리를 합니다. 그게 한두번 누가 말했으면 오보라고 임위원장선생이 말한 걸 그대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두번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말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최고당국자로부터 밑에 이르기까지 무려 수십 차례 이런 소릴 하니까, 우리가 이것이 오보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겠는가?

최근에 이야기한 것만 보십시오. 7월 17일 공로명위원장이 당정회의에서, 우리 5차 회담 때 당정회의에서 공로명위원장 발언한 걸 가지고 한번 문제시켰는데, 또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무얼 했는가? 핵문제 해결 없이는 북남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 있을 수 없다... 뭐 어렵다도 아니예요, 있을 수 없다! 기자들이 오보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번 봅시다.

7월 21일 이동북대변인이 또 뭐라고 했는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경제협력과 교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근본립장인데 이 정부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김달현부총리가 나와도 여기엔 변함이 없다, 이 소립니다. 이동북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김달현부총리를 만난 데서도 이렇게 말했죠? 이동북대변인이 남측 대변인으로서 고위급회담의 합의서를 리행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합의서 리행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말끝마다 가시돋친 말이 많습니다. 옛날 명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나쁜 것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 가시돋친 말이라고 했어요. 가시돋친 말이 많아요. 대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7월 21일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도 최각규부총리와 김달현부총리가 회담은 하지만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평행선을 그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7월 23일 임동원위원장선생의 장관인 최영철부총리가 서울 신라호텔 전경련 주최의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문을 내가 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했는가? 『장기적으로 북과 남의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경제협력은 할 수 없고 또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정치·안보관계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이렇게 명백히 지적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새로운 양상은 경제협력·교류를 정치·안보와의 관계 속에서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하던 것과 양상을 다르게 띠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괄합의, 일괄실천하자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는데, 이게 아마 우리 안을 받아들여서 이런 말을 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안보와 연결해서... 그런데 여기서 안보라는 것이 핵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할 때는 우리하고 명백히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원장관으로서 통일을 주관해서 말아보는 사람이 이게 실언이겠는가?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장점인 경제협력·교류를 잘 활용해서 북남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경제협력·교류에 대한 관점은 잘 세워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을 돕는 게 협력·교류가 아니며 자선사업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협력·교류를 합의할 때 북과 남은 민족의 공동의 번영과 리익을 위해서, 민족경제의 균형적이고 통일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자고 하였고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신세를 지거나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통일원장관이 이와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자극하면 안됩니다.

또 7월 24일 그쪽 최고당국자가 우리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이 걸림돌이라 했는가? 핵문제와 부속합의서다, 그중에서 우선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7월 24일 당정회의에서 통일관계문제를 토론하면서 또 같은 문제가 됐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과연 전제라는 말을 실지로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내가 딱 이것이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야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 없이는 북남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이게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전제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디 라디오한국이나 제1라디오나 또 한국문화방송이나 어느 한개 방송국, 한개 기자가, 어느 한 사람이 말을 취재했다고 하면 내가 오보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남측의 전체 방송국, 전체 신문기자들이 오보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오보라는 말로, 전제가 아니라는 말로 우리를 량해시키려 하지 말고 본심을 놓고 실지로 문제를 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7차 북남고위급회담의 합의문을 읽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 합의문의 다섯번째 항 로부모문제는 선생하고 나하고 앉아서 직접 합의하고 수표를 했죠? 선생하고 나하고 수표한 문장도 여기에 있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북과 남은 합의서 리행의 첫 선물로서』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없는가? 있습니다. 합의서 리행입니다. 로부모방문단, 예술단 교환은 전제가 뭐인가? 합의서 리행입니다.

또 북남고위급회담의 합의문의 서문에 내가 아까 읽은 것처럼 전제가 있는가, 없는가? 명백히합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자는 걸 전제로 하고 로부모방문단과 예술단 교환을 합의하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합의서 리행의 전제로 핵을 내다걸고 안하겠다니까, 그렇게 되면 로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의 전제가 왜 없는가? 우리는 말로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합의서 문장에다 전제를 넣어 놓았다 말입니다. 왜 넣었는가? 그쪽에서 7차 고위급회담 전에 부속합의서를 8차 때까지도 잘 안내오려고 하기 때문에 명백히 말하게 되면 그런 회피적인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넣었어요. 우리가 제기한 문장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쪽에서 부속합의서 8차 때까지 다 나오려고 하는가? 왜 이동북대변인은 우리 부총리 만난 자리에서 정치부속합의서 나오기 어려운데 협력·교류부속합의서만이라도 먼저 나오자고 공공연히 발언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동북대변인이 지금 정치합의서를 할 의향이 있

는가? 그럼 통일원장관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와 안보 속에서 다 하자고 하면서 왜 정치는 안하겠다고 하는가? 지금 그쪽 집안에서는 통일원장관이 하는 소리가 다르고, 이동복대변인이 하는 소리가 다르고... 합의서에 전제를 명백히 지적했으니까 전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것은 북남고위급회담 합의문에 문장으로 넣은 전제를 그쪽에서 똑똑히 리행하란 말입니다. 합의서를 리행하라, 합의서를 리행하는 게 전제다. 그러면 합의서를 리행하는 데다 핵이 전제라는 말을 취소하고 그렇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좀 물읍시다. 임위원장선생의 견해는 이동복선생이 말한 것처럼 정치부속 합의서가 8차에 안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올 것 같습니까?

남(임동원) : 그게 무슨 질문이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지금 인용하고 있는 제7차 고위급회담 합의문을 보세요. 거기 첫번째 항에 명백히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첫번째 항의 동그라미 세번째에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난 이대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북(김정우) : 아마 임선생은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매번 나보고 나와 앉으면 계속 말하는데, 그런데 왜 뒤에서 직접 말은 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자, 우리 부총리 만나서 곤란하다고 그래, 또 6월 20일 당정회의에서도 곤란하다고 그래,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합의서 리행 전반의 진전이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난 고위급회담 대변인 말을 임선생 말보다 좀더 믿어야 될 것 같

아서 하는 소립니다.

그렇게 되면 명백한 건 이제 위원장선생이 말한 것처럼 8차 회담 전에 부속합의서가 다 제대로 나와서 회담이 끝나고 부속합의서와 공동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합의서 리행이 된다고 그러게 되면, 이제 선생이 말한 것처럼 로부모방문단 문제를 우리한테다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핵을 전제로 걸고 합의서 리행을 안하니까, 이제 그 핵을 전제로 거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해서 전제를 우선 없애고 합의서 리행해야 로부모도 된다 말입니다.

핵문제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백히 그쪽의 이동복대변인한테 가서 전달하고, 통일관계자들 당정회의 다시 열고 토론하고 오든가 그렇게 하고 입장을 좀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렌즈훈련문제입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도상훈련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군대복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동훈련, 도상훈련, 지휘관훈련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내가 알건대는 금년부터 포커스렌즈 훈련이 도상훈련으로부터 기동훈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임동원) : 그렇지 않습니다.

북(김정우) : 심지어는 페르시아만전쟁에 동원되었던 기재들까지 여기다 동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마 다시 한번 알아 보시오. 군사분야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건대는 어떤 어떤 기재가 동원된다는 것까지도 나는 다 쥐고 있습니다. 시간상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페르시아만전쟁에 동원되었던 기재까지 다 동

원해서 실전 기동훈련을 한다는 것, 이렇게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도상훈련을 하던 것을, 팀스피리트훈련을 기본합의서 채택과 관련해서 중지를 하고, 도상훈련하던 포커스렌즈훈련을 기동훈련으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전쟁에 동원되었던 최신 군사기재까지 여기다 동원하며, 또 그 날짜는 신통히도 로부모방문단 날짜와 일치시키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쪽에 전제를 하지 말라 이르기 전에 그쪽에서 훈련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인모로인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간단히 언급하면 우리가 이 로부모방문단, 예술단을 임선생하고 나하고 앉아서 합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임선생하고 앉기 전에 회담탁에 나온 모든 남측 대표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원식총리를 제외한 전체 남측 대표들이 우리 대표들한테 한 이야기나, 또 회담탁에 나와 앉지 않은 비공식 인물들이 우리 사람들을 만나자고 해서 만난 회담장에서나 다 뭣이라고 했는가? 리인모로인 송환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해결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남측에서 제의해 오는 인도적 문제로서 이산가족 로부모문제를 이번에 우리 정무원총리동지의 기본발언에서 합의서 리행의 첫 선물로 해결해 주자 하였고, 옹당 그쪽에서도 신의를 지켜서 이걸 리행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병수대변인이 전제조건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북남고위급회담 합의문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공식적이거나 비공식

적이나 모두 일치하게 같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서 신의를 지킬 걸 전제로 하고 고위급회담 대변인이 전제라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신의가 리행되는가? 지키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리인모로인 송환문제를 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거없는 소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인모의 송환에 대한 청와대·통일원의 방침(뉴코리아타임스 1992년 6월 20일), 노정권의 한 고위당국자는 6월 9일 청와대와 통일원 등 대북관계부처가 이인모의 송환이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또 노대통령도 이씨 송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기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씨 송환이 늦춰지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안기관들은 국가보안법상의 문제 등을 이씨 송환 반대 이유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 등은 이밖에 북의 핵사찰과 관련하여 트집을 잡고 이씨 송환에 대한 반대 외에도 남북대화의 유보 등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정권이 이씨 송환을 고려하게 된 것은 높아가는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이 이상 이씨를 억류할 때 정권이 받을 이미지 손상을 고려하여 결국은 송환할 것이라고 서울의 한 소식통을 전했다.』

우리는 이런 보도를 접수한 후, 이게 6월 22일입니다, 지난 5차 협력·교류분과위원회를 26일날 했는데, 그쪽에서는 24일, 25일, 26일 아침,

저녁방송에서까지 리인모로인을 송환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에 기초해서 리인모로인 송환이 로부모방문단과 결부해서 아마 남쪽에서 진짜 북남관계 개선에 무엇인가 좀 이바지해보자고 이미 신의를 지켜서 하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제기한 전제조건은 무근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근거가 있어서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위원장선생이 당국을 대표해서, 내가 또 우리 당국을 대표해 합의했던 것만큼 당국에서 전제조건을 철저히 처리해야만 이 로부모방문 및 예술단 교환이 유산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을 명백히해 둡니다.

다음 리인모로인의 송환문제는 그쪽에서 7월 7일부 정원식국무총리 서한으로 답변을 내었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한다면 그 서한에는 송환방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흥정거리로 이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인모 송환문제는 다시 그쪽에서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임위원장선생이 7월 25일 한국문화방송 MBC에서 전략기획단회의가 그런 결정을 안했는데 보도를 잘못했다, 그래서 정부적으로 그쪽에다 편지를 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한국문화방송이 다시 보도를 내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오보라면 다시 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한테 들어온 자료 그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부모방문단문제가 늦어지는 책임은 명백히 그쪽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임위원장선생과 나하고 서울에서 합의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해각서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양해각서에 130명에 80명으로 한다, 관례대로 한다, 그 다음에 기자 30명, 수원 40명으로 한다... 다 명백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는 그 양해각서 토론을 한두 차례 하면 다 끝날 걸 실무대표접촉에서 무려 여섯 차례나 각서에 위반되는, 새롭게 200명이며 또 무슨 방문형식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잔뜩 끌고 나와서 시간을 끌다가 그 다음에 또 와서는 포커스렌즈훈련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또 10월달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로부모방문단문제를 우리가 끄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다른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끌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왜 양해각서 자체를 그렇게 인정을 안하고 그렇게 회담을 끝냈는가?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제반사실은 그쪽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 둡니다.

그리고 합의서 토의에 들어갑시다. 합의서는 이제 임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쪽 내려놓는 데 다른 의견 없습니다.

남(임동원) :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도 벌써 많이 지나갔는데 합의서 검토에 들어갑시다. 제가 한번 쪽 먼저 우리측 안하고 대조하면서 간단간단히 이야기해 볼까요?

북(김정우) : 예, 말씀하십시오.

남(임동원) : 우리 같이 협의해 보죠. 명칭은 합의가 됐지요?

북(김정우) : 예.

남(임동원) : 명칭은 두번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것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전문은 오늘 귀측에서 수정안으로 낸 것과 우리가

넌 것과 거의 같은데, 한 군데만 다른 것 같아요. 우리측의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하고 귀측의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만 다른데, 이걸 뭐 오늘 아예 합의해 버리죠. 다른 분과위원회도 보면 다 『협의한 데 따라』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만 고집해서 다르게 할까요? 같이 하죠.

북(김정우) : 협의한 데 따라?

남(임동원) : 그래요.

북(김정우) : 『협의한 데 따라』라고 합시다.

남(임동원) : 그러면 전문 합의됐습니다.

북(김정우) : 그렇게 합시다.

남(임동원) : 그 다음에 우선 장 제목을 먼저 봅시다. 우리는 『제1장 경제 교류·협력』, 귀측은 『제1장 경제협력·교류』,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북(손종철) : 예, 같습니다.

남(임동원) : 예, 편의주의에 따라서 교류·협력, 협력·교류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없는 거구요.

북(김정우) : 이번에도 또 그렇게 바꾸어야겠어요?

남(임동원) : 예?

북(김정우) : 통일로 가는 길인데 하나씩 조금 더 전진해야지, 편의주의라는 것 나는 마음에 안들어요. 그저 협력·교류 이렇게 해 놓읍시다. 뭐 교류를 앞에 놓는다고 교류가 더 중요시되는 것은 아니고...

남(임동원) : 완전 통일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웃음)

북(김정우) : 임선생이, 통일원차관이 그것 하나 아직 일치할 안시키겠다고 하니까, 회담이 정말...

남(임동원) : 이것은 관행이 그렇게 돼 와서 그래요.

북(김정우) : 아니 관행을 깨야지. 이제부터 관행을 깨 봅시다.

남(임동원) : 교류 · 협력이라고 우리는 통상 쓰지, 협력 · 교류란 말은 사용 안한단 말이야, 똑같은 내용이라도.

북(손종철) : 그래도 적극적인 것이 협력이죠, 교류는 그건...

남(임동원) : 어떻든지간에 표현상으로 우리가 관행으로 쓰는 것은 교류 · 협력이라고 씁니다. 또 그쪽에서는 협력 · 교류라고 쓰고...

북(김정우) : 아니,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십시오. 경제 붙고 그 다음에 무슨 교류 이것이 붙는 것하고 협력이 먼저 붙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쪽 최영철통일원장관의 서귀포 연설을 보십시오. 『경제협력』, 그쪽에서는 그저 간단히 『경협』이라고 하더만. 그렇게 먼저 표시했어요. 경제교류는 이번에 강조한 것이 없고 그저 경협을 먼저 표시합니다. 그래서 최영철...

남(임동원) : 제주도 연설문 또 열심히 연구하셨구만.(웃음)

북(김정우) : 나는 구체적으로 연구합니다. 글자 토까지 따져가면서... 그래 그것은 경제협력 · 교류라고 해놓읍시다. 제목부터 자꾸 차이지지 말고.

남(임동원) : 그것은 기본합의서에서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놔둡시다.

북(김정우) : 기본합의서? 기본합의서야 벌써 몇달 전에 한 것인데 (일동 웃음)...

남(임동원) : 저렇게 위반을 하려고 그러는구만 (웃음)...

북(김정우) : 아니, 점점 발전해야지.

남(임동원) : 그것은 우리보다 고위급회담에서 정한 것이니까 거기에 따

라 감시다.

북(김정우) : 대결시대의 유산이 그쪽에는 너무나 많아.

남(임동원) : 이젠 그렇게 해석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제2장...

북(김정우) : 자 그럼, 편의주의대로 한다?

남(임동원) : 그렇죠, 편의주의대로 그건 고위급회담 결정사항이니까...

북(김정우) : 정 그렇게 하겠으면 그렇게 놔둡시다.

남(임동원) : 그건 뭐 큰 문제가 안되죠.

그 다음 제2장의 명칭입니다. 제2장의 명칭은, 우리는 『사회문화교류·협력』, 귀측은 『사회문화협력·교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습니까. 합의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의 명칭입니다. 저희는 제3장의 명칭을 『인도적 사업의 실시』로 했고, 귀측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김정우) : 해결이 낫지 않오? 『사업의 실시』하게 되면 실시하다가 해결을 못봐도 그만입니다.

남(임동원) : 어떻게 또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웃음)...

북(김정우) : 아, 명백하지.

남(유득환) : 그런데 실시라는 말은 연속성이 있고 해결이라는 말은 좀 단절이라는...

남(임동원) : 끝난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데...

남(유득환) : 이젠 앞으로 계속해야 하거든.

남(임동원) : 이젠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북(김정우) : 아 글썸, 그러니까...

북(김채성) : 기본합의서 18조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북(김정우) : 그럼, 본회담에 준해서…

남(송영대) : 오히려 충실하게 하자면 거기에 『방문을 실시하고 재결합을 실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존중해서 반영시키겠다 하는 뜻입니다.

북(김채성) : 맨 마지막에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북(김정우) : 아니, 그리고 누가 들어봐도 『인도적 사업의 실시』 하게 되면, 인도적 사업으로 실시는 하는구나, 이렇게 되지만…

남(임동원) : 18조를 한번 같이 봅시다.

북(김정우) : 그러나 『인도적 문제의 해결』하게 되면, 아 뭘 해결하려고 저 사람들이 합의를 했구나, 이렇게 해서 좀더 낫지 않아요?

남(임동원) : 우리 김채성위원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18조 한번 봅시다. 기본합의서의 18조를 보면 두 가지 문제를 여기 규제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산가족문제, 하나는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두 가지를 함께 논했어요.

그런데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뭐 자유로운 서신거래, 왕래와 상봉,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실현』한다 하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가족문제에
요. 그래서 이것에서 빠진 나머지 조그마한 문제들은 『기타』로 해놨어
요.

이산가족문제는 실현한다, 실시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남북 양측이
합의를 본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인도적 사업의
실현이라든가 실시라든가 하게 되면 18조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쓴 것
이고, 인도적 문제의 해결 이것은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
한 대책을 강구한다.』하는 후반부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다소 들고,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
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논쟁을 또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걸 조
금 덮어두었다가 나중에 잘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봅시다.

북(김정우) : 덮어둘 게 뭐 있오? 제목 그것 하나 가지고...

북(손종철) : 여기 덮어둘 게 없어요.

남(임동원) : 덮지 않으면 자 인도적 사업의 실시로 합의봅시다. 간단하지
뭐.

북(김정우) :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는 내용에서 불합리성이 뭐인고 하면,
그쪽에서 『사업의 실시』하자고 할 때는 이제 송영대선생이 말한 것처
럼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래왕과 상봉, 방문 이것을 다 넣고 할 때는 실
시라고 하면 맞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도적 문제』라고 인도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뒷부
분에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여기에서 인도

적 문제의 해결... 그렇게 하고 실제로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서신거래, 상봉, 방문 이게 다 인도적 문제인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자고 해서 모여 앉은 것은 사실인데, 그저 『인도적 사업을 실시한다.』하게 되면 끝장을 못본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도적 문제의 해결』하게 되면...

남(임동원) : 끝장을 빨리 보자고 하는거요?(웃음)

북(김정우) :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항을 얼마나 수정해 가지고 나왔어요?

남(임동원) : 자 그러면 요문제 조금 덮어두었다가 나중에 토론합시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잘 안될 때는 덮어두었다가 다른 것 하고 하면 또, 쉽게 풀리는 때도 있고 그러더구만요,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 다음에 제4장의 명칭이 우리는 『수정·발효』로 되어 있고 귀측은 『이행기구 및 수정·발효』로 되어 있어 이행기구를 여기에 같이 묶었는데, 아까 제가 첫 발언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거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여기 넣어도 좋고 저기 넣어도 좋고,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고 양보하라고 하면 나중에 검토해서 양보할 용의도 있지만, 그러나 합리적으로 따져 보면 각 장에 들어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건 본질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할 거리도 아니예요.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다 들어가는데 어디다 넣는가 하는 것인데, 제1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은 사회문화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이견 적십자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아주 명료해지

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개 조항으로 해서 수정·발효조항에다가 또 이걸 쏙 넣어 놓는 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만일 독립시킨다면 제4장 이행기구하고 따로 독립시켜서 제5장 수정·발효로 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딴 이유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쪽 안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북(김정우) :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걸 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의 분과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체모를 맞추어 나가야겠다.

그런데 정치가 제목 함의하는 데는 상당히 앞섰습니다. 정치는 지금 어떻게 했는가? 7장에다 리행기구, 8장에다 수정 및 발효를 넣었어요. 갈라서 리행기구 따로 하고 수정 및 발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리행기구와 수정·발효 이렇게 하게 되면 장만 늘어나고 안에 내용은 적기 때문에 합쳐서 리행기구 및 수정·발효, 우리 북남협력·교류분과위원회의 특성과 정치분과위원회의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놓자.

그런데 만약에 그쪽측 안처럼 수정·발효만 있고 리행기구가 없으면 이걸 리행기구는 어디 갔는가? 매조항은 리행기구를 다루는 조항이 아닌데 거기에 붙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내어서 한 곳에 다 모으자.

남(임동원) : 아니 정치를 꼭 본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기본합의서를 본받읍시다. 기본합의서에서 매장마다 공동위원회를 두는 걸 딱 규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북측에서 늘 그런 것 주장할 때는 합리적으로 주장해서 또 그렇게 나오리라고 봤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

적 문제의 해결... 그렇게 하고 실제로 흠어진 가족·친척들의 서신거래, 상봉, 방문 이게 다 인도적 문제인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자고 해서 모여 앉은 것은 사실인데, 그저 『인도적 사업을 실시한다.』하게 되면 끝장을 못본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도적 문제의 해결』하게 되면...

남(임동원) : 끝장을 빨리 보자고 하는거요?(웃음)

북(김정우) :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항을 얼마나 수정해 가지고 나왔어요?

남(임동원) : 자 그러면 요문제 조금 덮어두었다가 나중에 토론합시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잘 안될 때는 덮어두었다가 다른 것 하고 하면 또 쉽게 풀리는 때도 있고 그러더구만요,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 다음에 제4장의 명칭이 우리는 『수정·발효』로 되어 있고 귀측은 『이행기구 및 수정·발효』로 되어 있어 이행기구를 여기에 같이 묶었는데, 아까 제가 첫 발언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거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여기 넣어도 좋고 저기 넣어도 좋고,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고 양보하라고 하면 나중에 검토해서 양보할 용의도 있지만, 그러나 합리적으로 따져 보면 각 장에 들어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건 본질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할 거리도 아니예요.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다 들어가는데 어디다 넣는가 하는 것인데, 제1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은 사회문화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이견 적십자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아주 명료해지

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개 조항으로 해서 수정·발효조항에다가 또 이걸 쑥 넣어 놓는 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만일 독립시킨다면 제4장 이행기구하고 따로 독립시켜서 제5장 수정·발효로 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만 이유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쪽 안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북(김정우) :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걸 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의 분과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체모를 맞추어 나가야겠다.

그런데 정치가 제목 합의하는 데는 상당히 앞섰습니다. 정치는 지금 어떻게 했는가? 7장에다 이행기구, 8장에다 수정 및 발효를 넣었어요. 갈라서 이행기구 따로 하고 수정 및 발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행기구와 수정·발효 이렇게 하게 되면 장만 늘어나고 안에 내용은 적기 때문에 합쳐서 이행기구 및 수정·발효, 우리 북남협력·교류분과위원회의 특성과 정치분과위원회의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놓자.

그런데 만약에 그쪽측 안처럼 수정·발효만 있고 이행기구가 없으면 이걸 이행기구는 어디 갔는가? 매조항은 이행기구를 다루는 조항이 아닌데 거기에 붙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내어서 한 곳에 다 모으자.

남(임동원) : 아니 정치를 꼭 본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기본합의서를 본받읍시다. 기본합의서에서 매장마다 공동위원회를 두는 걸 딱 규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북측에서 늘 그런 것 주장할 때는 합리적으로 주장해서 또 그렇게 나오리라고 봤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

요.

이거 그때 매장마다 뒤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나오니 이해가 안되는데(웃음)… 그런데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북(김정우) : 그러면 임선생, 이렇게 할까요? 기본합의서에 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걸 나하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기본합의서에 준한다.

남(임동원) : 공동위원회 넣는 걸 그렇게 하자 이거지.

북(김정우) : 아 글썄, 부속합의서 하는 것을 기본합의서의 장, 절, 체계대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합의를 하면 기본합의서대로 수정·발효로 하고 안에다 잡아넣는 걸 동의합니다.

남(임동원) : 공동위원회 위치를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북(김정우) : 아니 그 문제만 아니라…

남(임동원) : 아니 무슨 또(웃음)…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또 알아요.

남·북(일동) : (웃음)…

남(신현웅) : 복병이 깔릴 수 있지요.

북(김정우) : 머리는 나만 좋은 것 같지 않는데…

남(임동원) : 나는 머리가 훨씬 못 쫓아가(웃음)…

북(김정우) : 아니, 나는 왜 그런가 하면…

남(임동원) : 내 그건 시인할테니까…

북(김정우) : 그건 시인 안해도 좋아요. 좋은데…

남(임동원) : 워낙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말이야.

북(김정우) : 기본합의서 체계를 존중해서 그대로 하자고 하게 되면 기본
합의서에서 수정·발효만 있으니까 이걸 올리겠는데... 왜냐하면 다음
번에 절제목을 다는 것을 이제 그쪽에서 다 안달았던 말입니다. 기본합
의서 우린 다 달았는데... 그러니까 절제목을 장으로 해서 하나씩 조로
달 때 다 달아서 주겠다고 하면 이것도 기본합의서대로 하자 이거지.
이럴 때는 기본합의서에 충실해서...

남(임동원) : 그러니까 기본합의서에 있는 조를 각각 한번씩 쓰자 이거
죠?

북(김정우) : 그럼, 그럼...

남(임동원) : 그것은 우리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는 별로 맞
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7개 조항에 압축을 해버렸단 말입니
다. 할일은 많은데... 그걸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구성이 논리적으로 전
개되기 어려워요. 지금 잘해 봤는데, 비슷하게 해 봤는데 왜 그래요?
왜 또 후퇴하려고 그래요?

북(김정우) : 아니 후퇴가 아니라 조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임
선생이 지금 말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보진 않아도 그쪽에
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회문화 당신이 말아서 조 해오라. 그 다
음에 경제 당신이 말아서 조 해오라. 그러니까 임선생은 좀 쉽게 종합
만 하여 가져오는 것 같아요.

남(임동원) : 나 휴가 좀 갔다 왔어요.(웃음)

북(김정우) : 휴가 갔다 왔어요? 나는 그렇게 안해요. 나는 어떻게 하는

가? 사회문화전, 경제전, 인도적 문제전 다 해오라고 과업은 쥐놓고 앉아 종합적으로 균형을 볼 때는 내가 다 균형을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제 보라요. 그쪽에서 내놓은 것, 자유래왕부문은 기본합의서 그대로 글자 하나 안고치고 조항에다 옮겨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적 문제도 또 그대로 갖다 옮겨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옮겨 안냈단 말이지.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말하자면 일관성 있게, 기본합의서의 조를 갖다 옮기려면 다 옮겨 놓고 안옮기겠으면 다 안옮기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떤 데 가서는 옮겨 놓고 어떤 데 가서는 안옮기고... 자유래왕하고 인도적 문제를 보시오. 그대로 다 옮겨 왔습니다.

남(임동원) : 그 문제는 하나씩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검토해 봅시다.

북(김정우) :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합의서대로 충실해서 하자면 이것도...

남(임동원) : 아니 기본합의서의 조를 그대로 다 한번씩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그때 한번 해결해 봅시다. 우리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 다 훌륭한 분들이 모였는데, 민족역사에 남을 만한 것을 만들어 내야지.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더 좋은 표현방법이 있으면 그때 그때 발전시켜 나갑시다.

북(김정우) : 그러면 리행기구 및 수정·발효는 남겨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면 임선생이 무슨 자가당착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

요.

남(임동원) : 그렇게 공박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일동 웃음) 잘 나가다가 또 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 부속합의서의 제목, 전문, 장... 여기서 물론 3장, 4장 이것은 아직 보류해 놓았습니다만... 한번 훑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제1장의 첫째조부터 시작합시다.

북(김정우) : 임선생 이렇게 합시다.

남(임동원) : 어떻게?

북(김정우) : 나는 그쪽의 먼저 번 수정안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측 수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조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남(임동원) : 우리도 만들어 왔는데 그쪽에서 수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북(김정우) :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 안 오늘 내놓은 걸 가지고 수정안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남(임동원) : 여기 이미 수정안이 작성이 되긴 됐어요.

북(김정우) : 아니 오늘 건 지금 써넣기 바쁠텐데...

남(임동원) : 오늘 걸 반영했어요.

북(김정우) : 그렇기 때문에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걸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대조표를 만들면 위원접촉에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접촉에 넘기기로 하고, 우리 위원장들이 참가하는 분과위원회에서는 근본문제들에 대한 것을 의견교환을 좀 합시다. 그렇게 하고 다음번부터는 위원접촉에 넘기자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자

는 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근본문제로 되는 것들은 앞으로 위원접촉에서 해결하면 좋고, 못하면 위원장들이 만나서 해결한다.

남(임동원) : 좋습니다.

북(김정우) :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류사한 것들은 오늘 우리가 수정안 내놔기 때문에 위원접촉에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위원들 접촉에다 맡긴다. 이런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문제로 된 데 대해서 의견교환을 좀 합시다. 우선 당국승인문제예요. 여기서 그쪽에서 지금 무얼 잘 이해 못하고 이걸 하는가? 이제는 경제를 전문한 김태연선생께서 나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을 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난 전번 김인호선생이 경제기획원에 오래 있어서 경제가인가 하고서 계속 설명했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 법무가라서 잘 통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서울상업대학 나오신 김태연선생이, 경제를 전공하신 선생이 나왔기 때문에 좀 납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국승인문제 좀 잘 들어 주시오. 당국승인문제, 왜 이것은 관둬야 되는가? 한 마디로 말하게 되면 국제관례에 이걸 안하게 되어 있고 그쪽 법을 봐도... 그쪽의 무역법을 내 연구를 해봤어요. 내가 이것을 그쪽에서 하도 접수를 안해서 남쪽에 무슨 법들이 있어서 대체 이걸 잘 접수를 안하느냐 보니까, 그쪽 무역법에도 무역업무 허가를 받은 법인과 개인, 그 누구나 다 국내에서나 외국과나 다 장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북남협력·교류법이라는 것을 '9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하고 하는 것만 당국승인 받은 사람이 우리하고 통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합의서를 채택한 게 그쪽에서 협력·교류법을 만든 1년 후에, 정확하게는 1년 석달 후에 '91년 12월달에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합의서 채택 전에 만든 협력·교류법을 그쪽에서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하고의 경제협력·교류를 하자니까 당국승인제를 주장한다 말입니다.

그쪽의 지금 협력·교류법 12조, 13조를 보게 되면 다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결시대에 만들어 놨던 법이 화해·단합의 시대에 와서 맞지 않으면 고치고, 자꾸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말아 달라, 이게 첫째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 신뢰성과 책임성문제 때문에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좋다고 주장하는데, 무역을 알고 경제를 알고 상업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신뢰성과 책임성 때문에 정부가 검토한 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국제관례를 보시오. 신용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무얼 하자고 하게 되면 신용을 조사해요. 조사하는 방법이 전문기관인 상업홍신소라는 것이 있고 상업회의소도 있고 그 다음에 상회사 소개집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의 보증장을 개설하고, 말하자면 은행업무와 실무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신용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거래당사자가 검토를 하고 자기가 결심해야지, 거래당사자가 검토를 안하고 상대측 거래당사자의 상급이 검토를 해서 이 사람하고 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거 그저 비유해 말하게 되면 처녀·총각이 시집·장가갈 때 처녀·총각의 의견은 듣지 않고 그저 부모들이 정해주는 사람에게 시집·장가가 가라는 소리나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 반드시 자기가 살 사람하고 성격이 맞는가? 리상이 어떤가? 진짜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살 수 있는가? 다 교제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겠다 할 때는 도덕적으로 부모들의 승인도 받죠, 우리 동방례의지국에서는.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이런 내용승인이 아니라, 완전히 처음 당사자부터 승인제로 하겠다... 이걸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명백히 설명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수출입허가제로 승인한다. 그쪽에서 검사법이, 내 수출입검사법을 봤어요. 정부기관의 검사가 있고, 민간기관의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지적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용상 검토는 북남간에 협력·교류 그쪽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만나는 것도 너는 만날 수 있다, 너는 만나지 마라, 너는 안된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백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 합병법을 자꾸 인용하는데, 합병법을 잘 모르고 해요. '84년 9월달에 합병법을 발표할 때 내가 책임지고 합병법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래당사자가 무슨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계약내용을 가지고 합병회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정부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초발언문에도 그쪽에서 합병법을 실례로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내 아까 말했지만 내용승인은 하라. 그쪽 당국에서도 말하자면, 국가의 기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군사기밀상, 무슨 국가비밀상 못나갈 게 나가지 않는가? 또 그쪽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위 코콤 규제대상이 아닌가?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거래당사자 자체를 처음부터 지적해서 승인을 하는 이런 것은 안된다. 우리 합영법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 5차 발언 때 우리 무역부 지표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는데, 계획경제하는 우리도 절대로 무역회사들에다가 너네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너네는 어떤 걸 못한다 이렇게 안합니다. 거래지표는 줍니다. 그러나 내가 석탄지표를 받았다 하게 되면 석탄 사라는 지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남쪽의 석탄을 사오건, 소련의 석탄을 사오건, 헝가리 탄을 사오건, 중국의 무슨 탄을 사오건, 캐나다의 탄을 사오건 관계없습니다. 그저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빠른 값으로, 빠른 기한 내에 사오면 된다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역지표는 주지만 거래당사자 자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쪽에선 우리 합영법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 거래당사자문제도 우리가 마치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지표를 주는 것을 가지고 통제하는가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안된다.

특히 우리쪽에는 지금 3기업이 있어요. 합영기업이... 이 3기업이 그 쪽하고 할 때는 더더구나 지표도 안받습니다. 또한 이거 당국승인제라는 말을 넣어 놓으면 우리 나라에 한 200여개의 합영기업이 있는데 아 이거 무슨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 심사받습니다.

그래서 당국승인제는 안된다. 그리고 아까 기본발언에서 약간 언급했는데 기본발언에 언급 안된 내용을 내가 보충하면, 그쪽에서 다원화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민영은 비방·중상증지 우리가 통제 못하겠다고 관영, 공영만 비방·중상증지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의 이동복위원장이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합의서를 보게 되면 그 비방·중상증지의 주체는 집권정당과 국가, 공영, 관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민영은 죽어도 못넣겠다는 겁니다. 그래 왜 못넣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된다, 민영을 비방·중상증지하라고 합의서에 넣게 되면 자유민주체제에 위반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자유민주체제하에서 헌법을 지키고, 경제에서는 자유민주체제하에서 헌법을 안지키겠다는 겁니까? 아 그러면 언론기관보다 더 사영화된 경제는 어떻게 돼서 당국승인제로 통제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쪽 자체가 다 모순입니다. 정치에서 말하는 거나 경제에서 말하는 거나... 또 내가 당국승인제라는 것을 넣어 놓게 되면 법을 위반해서 위원장선생이 감옥에 붙들려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국승인제 그거 넣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이제 당국승인제 납득이 갑니까? 이걸 뺏시다.

남(김태연) :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당국승인하겠다는 취지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남과 북이 경제교류와 협력을 해 나가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다른 나라하고 쪽 해온 교류·협력 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뢰와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교류와 협력의 당사자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금 위원장선생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교류와 협력의 내용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북(김정우) : 그러니까 당사자승인을 그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다, 한마디로 그건데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 우리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당사자 고르는 것을 그쪽에서 골라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까도 처녀·총각 실패를 들지 않았어요? 당사자인 우리가 모르겠다는데 자꾸 우리를 위해서 그쪽에서 골라 주겠다는 거냐?

그렇게 하고 그쪽에 태연선생이 오늘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내 아직 구체적 파악은 없는데, 경제를 전문했기 때문에 이걸 남덕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연선생이 잘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하고 그쪽의 저 한국무역협회 남덕우선생이나 대한상공회의소 김상하선생,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창순선생 다 가서 좀 물어 보시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부총리가 그쪽에 나갈 때에 남쪽의 술한 기업들이 북과 협력·교류하자고 많이 찾아와 제기를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이제 어느 사람은 북과 하라, 어느 사람은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 놓게 되면 술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소기업중앙회에 한번 가서 좀 건의를 해보시오. 이렇게 우리가 당국승인을 하자고 그러는데 북에서 반대하는데 어느 게 좋은가? 어느 기업인이건 자기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데 대해서 그

걸 찬성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런 걸 제기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앓을 때마다 늘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서 다원화된 사회... 다원화된 사회라는 게 뭐니까?

사상에서 자유화, 정치에서 다당제, 경제에서 시장경제하는 게 다원화된 사회 같은데. 아 어떻게 해서 시장경제하는 그쪽에서 자꾸 이런 남이 안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가 이거지. 이걸 론리가 안섭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당국승인제를 가지고 론리가 옳다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 백명이고 스무명이고 여기 다 데리고 오라요. 어떻게 돼서 옳은가 들어보자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부당한 것 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걸 그쪽에서 양보를 하라요.

남(박운서) :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우선 김위원장 말씀하시기를 국제관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해외투자에 관한 법은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서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기 국민이, 자기 회사가 외국에 투자할 때는 항상 당국의 허가를,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경제체제하는 나라에서는 외환수급같은 것도 따져야 되고 또 이 투자가 나갈 때에 진짜 적정한 투자가 나가는가 그런 것도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500만불 이상은 통제하게 되어 있어 그게 첫째고, 두번째는 우리가 지금 남북간에 거래를 하는 방식이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첫 단계는 우리가 우선 청산거래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거래방식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이제 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 다음 단계는 완전

자유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역의 경우에는 청산거래협정이 주종이기 때문에, 청산거래협정이라는 것은 양국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일정한 한도를 놓고 또 품목을 정하고, 그 품목 상호간에 대금이 결제가 되고, 그렇게 대금이 결제되면 상호간에 계산을 하고, 연말이나 또는 분기별로 또는 6개월마다 청산을 하고... 그렇다면 사전에 너무 많이 들어와도 안되고 너무 많이 나가도 안되고, 따라서 양측의 외환수급상 밸런스, 균형문제도 있고, 또 청산거래에 의해서 오고가고 하는 물건들이 수급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세번째는 솔직히 그쪽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FTO 아니겠어요. 무역회사... 그건 바로 국가, 정부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전부 민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일정한 요건하에서 민간들이 다 자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들을 제멋대로 놔둘 수는 없고 어떠한 규칙 아래서 대외사업을, 무역을, 투자를 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업체들에게 룰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관은 이미 승인받은 기관이라 말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전혀 승인도 안받은 아무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무 신용도 없는 사람이 달려들었다 망해 버리면 어쩍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적은 일본이나 바깥에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는 대외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합영회사가

돼야만 중국하고도 싸울 수가 있고 일본회사하고도 싸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진짜 기술이 축적이 되고 경험이 있고 여기에 자본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북(김정우) : 박운서선생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우선 첫째로 박운서선생이 말한 문제...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어요? 내용승인은 그 어느 나라나 다 한다. 투자규모를 어떻게 하고 어떤 물자가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수출입검사를 통해서 승인제로 한다. 그러나 거래당사자 자체를 승인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없다는 것... 있는가 실례를 들어 보시오. 없습니다.

이제 선생이 말한 외화관리법, 투자법에 대한 것은 내용승인에 관한 겁니다. 그쪽 외화관리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조항수까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 외화관리법 자체가 거래당사자 승인하는 법이 아닙니다. 투자내용과 규모와 그 다음에 액을 가지고, 또 해당나라 정책에 관계해서 정부가 투자할 때 그것을 승인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당사자를 승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번째로 청산결제에 대해서는 박운서선생이 지난 시기에도 말했지만 경험은 선생보다, 또 그쪽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고... 선생들이 지금 뭘 모르는가? 기본합의서에서 지금 그쪽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청산결제를 한다고만 되어 있고 우리가 다음 조항에서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한다고 한 것을 그쪽에서는 안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이것을 맡아 가지고 승인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청산결제를 하자 하게 되면 첫째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청산결제를 한다는 것을 쌍방간에 합의하고 그 다음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은행을 지정한 다음에는 구조를 개설해야 됩니다. 구조를 개설한 다음에는 그 구조에다가 타방, 일방, 우리는 조선말로 오른쪽, 왼쪽이라고 해서 기입란을 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물자를 수입할 때는 우측에다, 수출할 때는 좌측에다가 기장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장을 하는가?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장에 의해서 기장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조까지 이렇게 해놓고 기입하기 시작하면서 한도금액을 얼마 이상은 초과 못한다, 초과할 때는 리자를 계산한다, 이런 내용을 또 은행간에 협정합니다. 이렇게 은행이 쪽 해오다 정부가 지정한 한도금액이 청산결제금액의 2%라고 했는데 2%가 초과됐다면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동위원회에서 이 대상에 대해서는 초과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는 수요하지 못한다, 짜릅니다.

정부는 바로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구조의 관리보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지, 당국이 승인해 가지고는 천상 그것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운서선생이 지금 말하는 청산결제도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그쪽에서 말하는, 여러 회사들이 달라붙어서 하다가

뭐 망하면 어찌느냐 어떻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가 그렇게 신용없는 회사들, 뭐 하다가 천만달러를 계약해 놓고 백만달러도 없어서 그러는 회사들 하고는 우리가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상담소도 내야 할 것을 예견했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하고, 그쪽을 통해서 신용조사도 해보고, 또 은행에서 보증장이란 것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거 절대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그쪽에서 자꾸 고집하는 것은 내가 보건대는 전략적 목적에 리용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영철부총리가 말했어요. 뭐 무슨 우리의 장점인 경제협력을 북남관계에 잘 활용해야 된다 하고 한 마디 자기 내심을 비쳤는데, 이거는 분명히 당국승인제로 해서 전략적 목적에, 말하자면 자본, 기술, 인원의 류동을 통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전략적 목적에 리용해서 경제협력·교류할 목적으로 이랬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안 이상, 더는 이것을 논의해도 접수를 안합니다.

그래서 임위원장선생, 이것을 그렇게 알고 가서 토론해 보십시오.

남(임동원) : 우리 통일담당 최영철부총리께서 하신 연설 벌써 두세번 인용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이해를 정확히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북경제교류·협력하는 데 세 가지의 중요한 고려사항을 전제로 해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번째는 우선 현재 당장에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든 경제적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윤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을 안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우리 기본 합의서 15조에 명시된 대로 통일되고 균형된 민족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설사 이윤에 안맞는 것이라도 해야 할 것은 당국이 추진해 준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이야기한 것을 지금 계속 김위원장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남북간의 경제협력사업만 먼저 전진해 나가고 정치·군사적인 문제는 해결 안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거의 병행해서 나가면 좋겠다. 병행의 원리다. 내 지난번 회의 때도 병행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연계』가 아니라 『병행』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

북(김정우) :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요. 받아들이겠다 이거지요?
요?

남(임동원) : 거기서는 『일괄타결, 동시실천』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조그마한 하나하나에도 전부 그것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크게 봐서 경제가 앞서갈 수 있지만,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정치·군사가 끄떡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병행해 나가야 된다, 균형있게 발전돼 나가야 된다, 정치·경제·군사 전부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자 하는 것이 두번째 원칙이에요.

다음에 세번째 원칙은 우리는 시장경제체제예요. 그쪽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고... 우린 당국에서 경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

기업들이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거죠. 김달현부총리 와서 그 대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말 할 때 제가 같이 들었습니다만, 기업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당국간에 먼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왜? 경제체제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당국간에 틀을 먼저 마련하자, 이것은 부속합의서를 말하는 것이겠죠. 또 부속합의서에 토대를 두고 마련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합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운동경기에 규정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경기자들이, Player들이 마음대로 뛰 수 있도록 해주자, 최초로 당국이 기본틀을 만들어 주고, 방향을 어느 정도 남북의 당국간에 협의해서 기본틀을 만들어 주고, 방향을 정해 주고, 그 다음에 도중에 조정을 해주고, 또 그 틀 내에서 운동경기가 진행되도록, 경제활동이 진행되도록 하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삼대 원칙입니다.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오해하여 가지고...

남(유득환) : 추가로 한 마디...

북(김정우) : 오해 같지 않고 이제 뭐 임위원장선생은 저쪽에서 써다 준 것 보고 하는 소리이고, 나는 방송을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남(임동원) : 아니 그것은 내가 회의에서 정한 원칙이에요.

북(김정우) : 아, 최영철부총리가 말한 것을 임위원장선생 자기가 정한 원칙에 따라 말하면 안되지.

남(임동원) : 아니 우리 정부가 회의에서 정한 원칙이라니까, 그리고 그것

을 최부총리가 세미나에서 되풀이 발표한 거예요. 그것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저도 다른 강연회에서 벌써 몇달 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북(김정우) : 좋습니다. 그래 최영철부총리선생이 말을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에는 관계없이 당국승인문제는 이제 실무적으로, 또 그쪽의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음, 정치분과하고도 논의가 안되지 않음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을 위해서도 철회해야 되고,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이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 명백히해 두고 다음 넘어갑시다.

남(유득환) : 실질적인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김위원장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당사자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면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죠. 상호적이고 쌍방적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한쪽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쪽에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법에도 합작투자를 외국에서 한다고 할 때에 사업승인을 하는데 반드시 거기 밑에는, 아까 위원장께서는 사업승인을 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 사업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신용이 있느냐, 또 그런 것을 할 만한 기술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승인을 해 주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업승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업자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결정해 가지고 내 책임 하에 하겠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사람 선정 안하겠다, 책임이 우리쪽에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영향이 양쪽에 다 미친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두번째 우리 지금 대외무역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외환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투자할 때는 외환관리법에서 하고, 교역을 할 때는 대외무역법에서 하는데, 지금 남북한문제는 왜 다른 나라는 안하는데 이렇게 하느냐는 것인데,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부속합의서 만드는 데는 이게 처음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특수성을 우리가 인정해야지요. 다른 데 없는데 왜 이걸 하느냐? 우리는 지금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북(김정우) : 유선생, 선생이 말하자는 것은 알 만한데, 지금 무엇을 잘못 이해하는가 하면...

남(유득환) : 그 다음에, 세번째까지 말씀드릴게요.

북(김정우) : 아니, 그것 들어 보나 마나 뻔해.

남(유득환) :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북(김정우) : 오늘 회담은 위원장하고 회담하는 것이니까, 선생이 말하자는 것 알 만한데, 선생이 무얼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상공부차관보 하게 되면 뭘 알 것은 명백하게 알아야지.

사업내용승인 자체를,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는다고. 사업내용승인할 때, 그때 당사자가 사업내용을 들고 가서 승인받는 것

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쪽에서 지금 내놓는 것은, 거래당사자승인문제는 사업내용승인 당시의 당사자 검토가 아니라 사업내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하고 접촉단계에서 당사자 검토하라, 그걸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가 책임지는가? 그런 무역관계가 없습니다. 다 계약서에서, 계약서에 벌칙조항도 넣고, 그 다음에 중재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넣고, 중재가 해결 안될 때는 상부에 어떻게 간다는 것도 넣고, 다 조항이 되어 있다 말이야.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 안되면 은행에서 돈받기 위해서 은행보증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당국이 암만 선정했다 해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국에서는 빨리 해결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조언이나 주었지, 돈을 우리에게 물지 못합니다. 또 우리 당국이 그걸 책임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가? 거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계약당사자가 지불 못하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받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되고, 중재가 가야 돼. 이게 국제무역관계란 말이야.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무슨 북남의 특수성을 논의하는데, 우리 북남의 특수성이란 게 뭐요? 북남의 특수성이란 게... 지금까지 해오던 무역관계에 비추는 것이지, 자유롭게...

남(유득환) : 한 마디만 더 드릴게.

북(김정우) : 지금까지 잘 안하던 것 자유롭게 하자는데 왜 자꾸 발목을 매려고 그러는가?

남(유득환) : 왜 그러냐 하면,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 사업을 많이 하면, 교류·협력을 많이 하면 반드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잘할 때는 99%가 잘 되더라도 1%...

북(김정우) : 분쟁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걸 잘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하면 돼?

남(유득환) : ... 1%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우리 통상마찰 같은 게 교역이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특수성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요. 다른 나라는 전부 분쟁절차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돈을 갚을 것 갚고, 클레임 뭐 하고, 그것은 상업적으로, 커머셜로 해결되는데, 우리는 바로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상업적으로만 해결되는 부분을 초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북(김정우) : 아니, 해 봤오?

남(유득환) : 그렇게 발생하지요.

북(김정우) : 커머셜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발생하는지 해 봤는가? 해 보지도 않고, 해 보자고 생각하고 그런 걸 왜 자꾸 넣는가?

남(임동원) : 이 문제는 좀 쌍방이 보다 더 검토해서 전향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도록 합시다.

북(김정우) : 임선생, 이렇게 하자요. 이것이 몇 차례 반복되는데, 내가 이것이 왜 해결 안되는가 가만히 연구해 봤어. 임위원선생이 일을 쉽게 해서 그런다고. 힘들어도 위원장이 직접 료해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위원장이 결심하라구요. 이걸 자꾸 위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그저 계속 같

은 소리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래 내가 서명하는데 당국승인제를 넣고는 절대 부속합의서 채택 못한다는 것 이것을 명백히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그쪽의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쪽 시장경제체제에도 위반되고 우리한테는 그쪽에서 지금 무엇을 노린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요. 내가 다 말은 안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의 전략에 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접수할 수 없어.

남(임동원) : 전략, 이런 것과는 관계없고 양 경제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해 보자는 뜻에서 그러자는 것 아니겠어요? 요 문제는 서로 좀더 검토하도록 합시다.

북(김정우) : 예, 연구를 합시다. 그 다음에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 이거 술하게 쌍방에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 한 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조 3항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북남간에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하도록끔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거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내용을 교통로 개설과 연결 안시키겠다고 그러니 우리가 자꾸 무슨 의심이 가는가?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뭐 그걸 용당 할 것이라면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 따라 교통로 연다. 그 해소 전에는 임시교통로를 연다. 그 다음에는 해로를 연다. 임시교통로를 통해서 인적래왕을 한다... 그쪽에서 자꾸 우리가 인적

래왕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발언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요구가 그쪽에 납득이 갈 겁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남(임동원) : 지금 그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동해안 하나, 서해안 하나 해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육로로서는 임시교통로를 개설하기로 하자, 이것은 당장에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되는 데에 따라서 하자, 이것이 귀측의 주장이지요?

북(김정우) : 예.

남(임동원) : 좋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말이지요, 서로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생각을 좀 달리해 봅시다.

우리 주장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해로를 연결하는 것은 이의가 없고, 또 육로도 한 군데는 연결하자, 또 공로도 한 군데 연결하자, 우선 그렇게 하고 교류·협력이 증대되는 데 따라서 더 많이 열자, 2단계 접근방식으로 제시했어요. 거기에도 2단계 접근방식이에요. 말하자면 우선 제1단계에서는 해로 두 군데 하고...

북(김정우) : 임시교통로...

남(임동원) : 임시교통로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단계화하여 생각하는 것은 같은데, 우리가 육로를 하나 더 주장했고, 철도까지 되면 더 좋겠다고 물론 주장했지요, 공로도 주장하고... 이것 하나씩은 하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귀측이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고 하니, 한쪽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한쪽에서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타결점을 모색합시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육로의 임시교통로를 먼저 개설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질문했더랬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임시교통로를 연다는 것이...

북(김정우) : 인원래왕에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 그 다음에 어느 지점을 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 북남고위급회담 다닐 때...

남(임동원) : 판문점에서 갈아타고 간다 하는 것이지요?

북(김정우) : 아니, 그건 뭐...

남(임동원) : 아니, 예를 들어서 판문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임시교통로로 지정됐을 때, 판문점에서 우리 차 타고 갔다가 내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쪽 차 타고 가고 하는 것을 임시교통로라고 하는가?

북(김정우) :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지.

남(임동원) : 그럼?

북(김정우) : 그 임시교통로라고 하는 것은 갈아타는 것을 임시교통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여는데 그것을 갈아타는가, 아니면 그냥 그저 자기 차 타고 나가는가 하는 것은 합의에 따라 할 수 있는 거구.

남(임동원) : 이를테면 경제협력이 잘돼서 곧 뭐 남포공단도 하자, 우리가 그쪽에서 이러저러한 것도 사오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북한의 지하자원을 어디서 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이를테면 서울에 내려놓기를 원할 때, 그 트럭이 서울까지 올 수 있느냐? 또 우리 짐을 싣고 남측의 컨테이너트럭이 남포까지 갈 수 있느냐?

북(김정우) : 갈 수 있지.

남(임동원) :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북(손종철) : 우리 추력에 우리 운전수가 타고 그쪽까지 갈 수 있어요.

남(임동원) : 가서 짐을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북(손종철) : 그것을 일정 기간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김정우) : 그럼 그럼...

남(임동원) : 합의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임시교통로입니까?

북(김정우) : 그럼.

남(임동원) : 이를테면 혹시 관광사업 벌어진다고 할 때 어느 지점까지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버스를 해서 갈아탄다든가 그럴 수 있겠지만서도, 갔다가 도로 그 차 타고 온다든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북(김정우) : 그럼. 그 어떻게 앞으로 임시교통로를 열어 놓고 매번 판문점에서 술한 짐짝으로 옮겨 신고 복잡하게 하겠어.

남(임동원) : 그럼 임시와 임시 아니라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상과 임시의 차이가...

북(김정우) : 기간을 선정하는 것...

북(손종철) : 전당 합의에 의해서...

북(김정우) : 전당 기간 선정하는 것.

남(임동원) : 그러면 정상적으로 열 때는?

북(김정우) : 그건 기간 선정할 게 없지요.

남(임동원) : 해로도 전당 아니겠어요? 지금 해로 연다는 게...

북(김정우) : 아니, 해로는 일단 합의되면 건당이 없어요.

남(박운서) : 예를 들어 해로는 스탬프 받았다 하면...

북(김정우) : 언제부터 해로를 연다 하면 국제항로 리용하도록 그대로 합니다.

남(박운서) : 그대로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 건당 합의하려고 그러면 매번 회의를 해야 되네요. 자, 우리 이런 물건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간다, 또...

북(김정우) :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몇월부터 몇월 사이까지 열어 놓고 어떠한 물건을 넘기고 넘겨 받는다, 혹은 몇월부터 몇월까지 열어놓고...

남(임동원) : 짐을 부리는 장소는 남포다, 서울이다, 수원이다, 이렇게...

북(김정우) :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남(임동원) : 그래서 임시교통로라는 개념이 우리가 명확치 않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육로를 개설하자는 뜻과 마찬가지로 뜻이 돼 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육로도 합의보는 데 따라 처음엔 그때 그때 열겠지, 항상 열어 놓고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남북의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 애매해진다 말이에요.

북(김정우) : 그쪽에서 하자는 교통로라는 거는 한번 열어 놓으면 그건 닫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남(임동원) :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이상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니까...

북(김정우) : 그러니까 우리 안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임시교통로라는

게 진짜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남(임동원) : 그러면 항로도 임시항로를 개척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서로가 합의해 가지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백두산에서 한다, 한라산에서 한다 할 때 우리 비행기 타고 삼지연에 간다, 그쪽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온다... 이것은 일회성이거든. 그러니까 합의보면 되는데 이것이 임시항로 아니에요?

북(김정우) : 임시항공로는 왜 못하는가? 군사적 대치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공이 정찰에 리용될 수 있다. 그건 국경에서 비행기 갈아탈 수 없으니까, 자기 비행기로 가야 되니까, 그 어느 나라도 이런 건 허용 안한다 말이에요.

남(임동원) : 정찰에 이용될 수 있다...

북(손종철) : 그래서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가 중요한 것이지요.

남(임동원) : 철도는 어떻게 되는가? 철도는 선을 연결해 놓고 필요한 때만 다닐 수는 없는가? 임시철도 운행, 그거는 안되는가?

북(김정우) : 그건 우리가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우선 다리를 놓자는 사업부터 복잡해요. 비무장지대 지뢰 해제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정거장 건설, 그 다음에 뭐 다 검사, 복잡합니다.

남(임동원) : 시간걸리지. 그건 뭐 합의한다 하더라도 대뜸 몇달 내로 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뭐 한 1년이 걸린대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북(김정우) : 철도, 도로를 놓을 비무장지대 지뢰 해제부터 복잡해.

북(손종철) :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남(박운서) : 임시교통로에는 기간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점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라는 것에 합의를 하면 그 사이는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다?

북(김정우) : 그럼.

남(임동원) : 그럼 임시교통로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좀 합의를 해 봅시다. 부속합의서 외에 별도로, 이제 논의된 내용의 것을 명백하게...

북(김정우) : 그건 이제 공동위원회에서 임시교통로란 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 해놔야지. 세부합의서, 공동위원회 세부합의서...

남(임동원) : 아니, 만일 임시교통로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육로를 열자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 돼 버리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북(김정우) : 그럼 이것 우리 것 합의한 걸로 넘어갑시다.

남(임동원) :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한번 위원장간에 생각을 해 봅시다. 우선 말이죠, 남북간에 해로를 연결하고, 두 군데 재의한 대로, 그 다음에 육로 임시교통로를 개설한다, 이게 일단계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말이죠, 어느 항에 그런 게 들어 있지만, 남북 사이에 교류·협력이 증대되는 데 따라서 육로·해로·공로를 추가적으로 연다 하는 건 이번이 귀측안에도 우리측 안을 받아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대개 그 선상에서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임시교통로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치 않아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뜻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뭐 『군사적 대결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이런 말 쓸 필요도 없이 그건 자동적으로인데,
단지 교류·협력이...

북(김정우): 그 앞에 추가로 연다는 그 위에 써넣지 않으면 그건 왜 추가로 여는가 그게 해명이 안되죠.

남(임동원): 군사적 대결상태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느냐?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의해서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이걸 이렇게 한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같은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북(김정우): 아 글썬, 명백한 것을 왜 안쓰겠다고...

남(임동원): 그러니까 군사적 대결상태 문제는, 아까 우리 머리가 좋으신 김위원장께서 미리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나는 건데, 군사공동위원회 합의서 제2조 3항 거기에 딱 들어 있는데 왜 여기에 또 씁니까?

북(김정우): 글썬 있기 때문에 왜 추가로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남겨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문이 없어야지. 왜 이걸 추가로 하는가?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하겠다는 거로구나, 거 명백한 건데... 그쪽에서는 전쟁을 원하오, 평화를 원하오? 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를 그렇게...

남(임동원): 왜 또 거창한 문제예요?(웃음) 왜 갑자기 거창하게 노시오? 이것은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봅시다.

북(김정우): 그러니까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 따라...

남(임동원): 그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봅시다. 가능하면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께도 관심을 것 같다는 게 우리측 입장인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연구를 해 보세요.

북(김정우) : 어떤 때 보면 통일하자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전쟁하자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 따라』란 것을 싫어하니까...

남(임동원) : 그 다음이 무엇인가...

북(김정우) : 임위원장선생, 술하게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나머지 것들은 놔두고 위원접촉에 넘깁시다.

남(임동원) : 아니 이제 두개만 더 의논해 보면 되는데 왜 그래요? 네 가지 문제 중에 두 가지 문제 마저 합시다.

북(김정우) : 그럼 간단 간단히...

남(임동원) : 간단 간단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김위원장의 얘기가 길어졌지.

북(김정우) :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

남(임동원) : 그것은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구태여 거기 없어도 되는 조항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북(김정우) :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해 보시오. 자유래왕부문을 정치분과 위에 넘기지 않겠어요? 자유래왕부문이 정치에 있던 것을 임위원장선생이 부디 서울에서 협력·교류에 넣어 가지고...

남(임동원) : 기본합의서에 합의된 대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또 기본합의서에 자유래왕래가 교류·협력에 들어 있는 걸 왜 넘기자고 그래요?

북(김정우) : 그러면 왜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자유래왕부문에 안 적

겠다고 그러시오?

남(임동원) : 아니, 어차피 자유왕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은 해소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해당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그러니까 논의하게 놔두라 이거예요.

북(김정우) : 아니 지금 이동북위원장이 뭘 반대하는가? 좀 그쪽에서 잘 들어 뵈다가 충고를 주라요. 화해분야에서 우리가 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안을 냈는데, 이걸 반대한다 말이야. 이러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는 응당 제거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기본합의서 1조, 2조를 보시오. 거기다 체제를 인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남(임동원) : 우리 일도 바쁘는데 정치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북(김정우) : 아 그런데 정치분과위원회에서 해결 안하겠다고 하니깐 우리가 지금...

남(임동원) : 이 문제는 한 군데서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진척을 시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도문제에 가서 오늘...

북(김정우) : 가만 임선생, 여기서 정치가 할 내용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할 내용이 따로 있는데, 우리 자유래왕에 관한 내용은 여기다 지적해 놔야 앞으로 실천단계에 가서는 합쳐서 정치가 하든지, 공동위원회에서 토론 하든지 하더라도, 우리 몫은 우리 몫대로 찾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남한테 미루면 되겠어요?

남(임동원) : 그렇게 하자면 정말, 복잡성을 초래한다는 말은 그쪽에서 많이 쓰는데, 왜 그렇게 복잡성을 초래하는 주장을 자꾸 하세요?

북(김정우) : 다시 좀 연구하십시오. 다음 넘어갑시다.

남(임동원) : 좀 긍정적으로 연구하세요. 그 다음에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귀측이 내놓은 수정안은 마지막쯤에 가서 무엇인가 나오리라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예상을 했는데, 몇가지가 빠졌습니다. 이왕에 집어넣을 바에야 다 집어넣지... 기본합의서에는 합의된 네 가지 인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플라스 하나 하면 다섯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신교환을 하게 하자, 두번째는 서로 만나게 해주자, 면회소를 설치해 가지고... 세번째는 서로 고향방문하게 하자, 네번째는 재결합하게 하자, 아울러 이런 것들이 다 빨리 해결이 안되더라도 특별적으로 방문단사업을 하자, 말하자면 이거 다섯 가지 아니예요?

그런데 오늘 받은 것을 보니까, 오늘 하는 것을 보니까, 재결합하고 그 다음에 방문문제에 대해선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그것은 또 의논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쉽고 당장에 해결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는 것, 또 문선명인가 누구하고는 합의해서 발표했던 것은 왜 여기에서 뺐어요? 서신거래하고 면회소 설치하는 것 왜 뺐어요?

북(손종철) : 임위원장선생, 귀측의 1장 5조 1항을 보십시오.

남(임동원) : 우리측의 1장 5조 1항...

북(손종철) :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임동원) :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물과 전기통신은 남북연락사무소에 우편물교환실과 전화교환실을 설치하여 교환·연결한다.』 그러니까 이산가족문제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니까 이것을 뺐다?

북(손종철) : 그렇죠.

남(임동원) :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니까?

북(손종철) : 그럼, 따로 할 것은 없어요.

남(임동원) :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세요.

북(손종철) : 그 다음에 면회소 문제로 1장 2조 9항을 보십시오.

남(임동원) : 1장 2조 9항...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 촉진에 필요한 기구를 판문점에 설치·운영한다.』 이거예요?

북(손종철) : 예, 판문점에 기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남(임동원) : 아니, 이것은 목적이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 촉진에 필요한 기구를 판문점에 설치·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북(손종철) : 거기에서 그저 이것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북(정덕기) : 그렇죠. 그것은...

남(임동원) : (웃음) 아니 손선생, 처음엔 그럴듯하게 나가다가 두번째는 어떻게 삼천포로 빠져요?

북(손종철) : 자, 들어 보십시오. 지금 판문점에다 여러 개 설치할 것을 매 조항에다 넣는데, 판문점이라는 게 지금 요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경제에서 놓는 거나, 거기에 추가해서 리용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다 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임동원) : 장소개념으로 말하시는구만.

북(손종철) : 우리가 면회소를 반대해서 이것을 빼놓는다, 경제기구를 놔두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죠.

남(임동원) :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산가족의 면회소라는 말이 어딘가 들어가야지.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구를 둔다는데 거기에 걸다리로는 이산가족도 만나면 좋다... 그런데 이산가족 만나면 좋다고 말로만 그러지, 어디 합의된 게 없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북(김정우) : 이렇게 합시다. 분과위원회 합의서에다 공동위원회에서 할 것까지 다 일일이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어떤 원칙에서 했는가 말하게 되면 공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남겨둔다, 분과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구체적 대책을 리행할 것은 여기다 지적한다, 이런 원칙에서 했으니까 그 면회소 설치문제는 앞으로 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토론해서 설치하면 되지요.

이제 그쪽에서도 말했지만 뭐 문선명선생하고 합의한 것을 북남간에 무슨 뭐 우리가 꼭 빼야겠다고 결심하고 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 그렇게 의심할 것이 없고, 공동위원회가 면회소 설치문제에 필요하다면 토론해서 한다, 판문점에다 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토론하자.

남(임동원) : 김선생, 기본합의서 18조를 좀 보세요.

북(김정우) : 아 18조 내 머리 속에 다 있어요.

북(손종철) :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임동원) :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물과 전기통신은 남북연락사무소에 우편물교환실과 전화교환실을 설치하여 교환·연결한다.』 그러니까 이산가족문제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니까 이것을 뺐다?

북(손종철) : 그렇죠.

남(임동원) :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니까?

북(손종철) : 그럼, 따로 할 것은 없어요.

남(임동원) :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세요.

북(손종철) : 그 다음에 면회소 문제로 1장 2조 9항을 보십시오.

남(임동원) : 1장 2조 9항...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 촉진에 필요한 기구를 판문점에 설치·운영한다.』 이거예요?

북(손종철) : 예, 판문점에 기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남(임동원) : 아니, 이것은 목적이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 촉진에 필요한 기구를 판문점에 설치·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북(손종철) : 거기에서 그저 이것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북(정덕기) : 그렇죠. 그것은...

남(임동원) : (웃음) 아니 손선생, 처음엔 그럴듯하게 나가다가 두번째는 어떻게 삼천포로 빠져요?

북(손종철) : 자, 들어 보십시오. 지금 판문점에다 여러 개 설치할 것을 매 조항에다 넣는데, 판문점이라는 게 지금 요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경제에서 놓는 거나, 거기에 추가해서 리용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다 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임동원) : 장소개념으로 말하시는구만.

북(손종철) : 우리가 면회소를 반대해서 이것을 빼놓는다, 경제기구를 놔두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죠.

남(임동원) :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산가족의 면회소라는 말이 어딘가 들어가야지.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구를 둔다는데 거기에 걸다리로 이산가족도 만나면 좋다... 그런데 이산가족 만나면 좋다고 말로만 그러지, 어디 합의된 게 없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북(김정우) : 이렇게 합시다. 분과위원회 합의서에다 공동위원회에서 할 것까지 다 일일이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어떤 원칙에서 했는가 말하게 되면 공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남겨둔다, 분과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구체적 대책을 리행할 것은 여기다 지적한다, 이런 원칙에서 했으니까 그 면회소 설치문제는 앞으로 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토론해서 설치하면 되지요.

이제 그쪽에서도 말했지만 뭐 문선명선생하고 합의한 것을 북남간에 무슨 뭐 우리가 꼭 빼야겠다고 결심하고 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 그렇게 의심할 것이 없고, 공동위원회가 면회소 설치문제에 필요하다면 토론해서 한다, 판문점에다 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토론하자.

남(임동원) : 김선생, 기본합의서 18조를 좀 보세요.

북(김정우) : 아 18조 내 머리 속에 다 있어요.

남(임동원) : 그러면 머리 속에 다 있는 사람이 왜 여긴 빠트렸어요?

북(김정우) : 어느 걸 빼냈어요?

남(임동원) : 자 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방문, 그러면 이 기본합의서의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담는 것이 부속합의서다, 그렇게 합의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어디 갔는가, 이게? 서신거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왜 하나도 없는가? 이제 그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조금 조정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지만, 그러면 상봉은 어디 갔는가, 상봉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어디 가 버렸어요?

북(김정우) : 아니 그러니까...

북(정덕기) : 자유래왕문제가 있으니까, 자유래왕하면 스스로 상봉되는 것이고...

북(손종철) : 상봉 안하고 자유래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남(임동원) : 이것 참 문제가 큰데, 곤란한데(웃음)... 김선생, 오늘 그래도 상당히 성의껏 해 가지고 나온 것을 정말 내 평가하는데, 면회소문제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어요.

북(김정우) : 면회소문제, 기타문제, 그것은 공동위원회에서 한다.

남(임동원) : 왜 한 가닥 뛰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한 마디 있어야 되잖아요?

북(김정우) : 아니, 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강조를 했다구. 남의 할 일

을 다 가로채면 적십자단체에서도 할 일도 없거니와...

남(임동원) : 그것은 한 마디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적십자단체에서 하게 하자는 것이 우리 얘기 아니예요?

북(김정우) : 이번에 우리 당국간에 량해각서 만들어 넘겼더니 어디 적십자가 받아먹었습니까? 6차 회담까지 계속 앉아 싸움만 하는데, 아주 큰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권능을 침해해서는 안돼요.

남(임동원) : 김선생, 우리 위원회에서 그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북쪽은 연내에 면회소 설치·운영 같은 것도 하자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에 했잖아요? 하자는 이야기인데, 여기 집어넣자 말이야. 넣고 하면 좋은데, 그걸 왜 빼 놓고 하자는 것이예요?

북(김정우) : 빼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런 해당직능에 맞게 쓰자...

남(임동원) : 나는 김위원장이 그 이야기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 연내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요새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졌어요.

북(김정우) : 아 그쪽에서 이것저것 덩다 걸어서 합의서 리행 안하겠다니까 정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임동원) : 그러면 그것은 좀 넣는 방향으로 하고, 서신거래는 아까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위원접촉 때 의견을 제시할게요.

북(손종철) : 한 마디 하겠는데, 검토를 좀 잘해 주시오. 왜 그런가? 인도 문제... 14조 같은 것에다 『이산가족들의 주소와 생사확인 및 이 합의서 제3장 인도부문의 이행과 관련된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의

주관하에 한다.』이랬는데, 여기서 주소 및 생사확인이라는 문제하고 적십자단체라는 종합적인 문제를 갖다가 떡 붙여 놔는데 문건상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안되지요.

남(임동원) :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북(손종철) :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런 것을 좀 하도록... 큰 문제에다 조그만 문제를 떡 붙여 놓으니까 억지로 만드는 감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검토하셔야 됩니다.

남(임동원) : 그래, 쌍방이 검토해 봅시다.

북(정덕기) :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임동원) : 예, 말씀하세요.

북(정덕기) : 북남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한다, 이건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미 지난 북남적십자회담 8차 회담 때, 송영대선생도 앉아 계시겠지만, 북남적십자단체들은 어떻게 합의했는가 하면, 북과 남사이에 흠어진 가족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 포괄적인, 아주 중핵적인 방도로서 자유래왕문제를 이미 합의했습니다. 자유래왕, 흠어진 가족들의 자유래왕, 이걸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해결하자,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원칙으로 놓고, 이외 문제들은 앞으로 두고 보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존중하는 의미에서...

남(송영대) : 그런데 우리측 초안 속에 자유왕래가 들어 있었고, 귀측의 수정안 속에서도 자유왕래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건 다행스런 일입니다.

문제는 이산가족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이번 부속합의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포괄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귀측 수정안에 빠져 있는 서신거래문제, 면회소 설치문제, 방문단문제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세요.

북(김정우) : 글썸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는 적십자가 할 것을 다 지적하자고 했고 우리는 원칙적인 것만 지적하자고 하다가 우리가 양보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쪽에서 다 양보하라, 의미가 이진데, 그렇다면 회담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하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

남(임동원) : 그것도 아마 다음번에 무엇과 또 바꾸자 그러려고 남겨 놓은 것 같아(웃음)...

북(김정우) : 바꿀 건 없고...

남(임동원) : 내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

북(김정우) : 그만합시다.

남(임동원) : 그러면 오늘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보십니까?

북(김정우) : 예,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우리 위원들 접촉에 넘겨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요구를 합시다.

전번 우리 5차 회담 때 잘못된 역사기록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현 일본당국에 제기하는 결의문 채택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번에 좀 답변을 가지고 나왔으면 합니다.

왜 이것이 반드시 지금 시기성을 요하는 문제인가 하는 이유는 그쪽

에서 충분히 잘 알고 있겠고, 또 최근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쪽 학계에서나 또 재야계통에서나 많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와 달라. 그리고 그쪽 총리편지로서 답변 줬다 하는 문제는 그건 납득이 안갑니다. 그걸 강조를 합니다.

남(임동원) : 그럼 좀 납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총리편지로서 답변 줬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는 그 역사학자들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를 같이 하도록 해주자 하는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토론을 합시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확실히 해두고, 다음 위원접촉은 언제쯤...

북(김정우) : 가만 임위원장선생, 이건 우리가 정의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걸 제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사회문화협력·교류공동위원회가 나오면 학술적 차원에서 그걸 연구를 하자, 이렇게 답변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제의에 대한 호응이 아니며 또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일본당국이 지난 시기 자기들의 그와 같은 식민지통치를 합법적인 걸로, 당시로서는 합법적인 걸로 하면서 사죄를 똑똑히 안하고 보상을 똑똑히 안하기 때문에 똑똑히 이걸 사죄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뭐 65년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서 이게 다 해결됐다는데, 실지 해결 안된 것만은 사실이고... 내, 자료는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하는데, 그 『김종필-오하라메모』 최근의 내용도 다 보시오.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 일본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도 보

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일본을 이 상태로 가만 놔두면 지금은 유엔깃발을 들고 바다를 건너오지만 앞으로는 일장기를 들고 다시 바다를 건너오는 정황이 생긴다. 우리 일본문제를 아주 북과 남이 경계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걸 좀 다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조선역사학회가 그곳 한국학술단체협의회에다가 회담하자고 편지를 낸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답변을 다음번에 가지고 나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편지 보냈는데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남(임동원) : 자, 다음 문제 정합시다. 다음 위원접촉은 언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북(김정우) : 8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쪽 날짜가 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8, 9, 10, 3일 중에 하나 꼽죠.

남(임동원) : 안물려져 있어요. 8월 3일에 군사분과위원회 위원접촉이 있고, 7일에 적십자대표접촉이 있기때문에 4, 5, 6일이 비어 있어요.

북(김정우) : 8월 6일이?

남(임동원) : 4, 5, 6.

북(김정우) : 아, 4, 5, 6. 그새에 아마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임동원) : 뭘 또 있게 하려고 그래요?

남·북(일동) : (웃음)...

남(임동원) : 일방적으로 뭐 있으면 되나...

북(김정우) : 우리는 계획적으로 하는데...

남(임동원) : 내주인데... 8월 5일에 합시다. 자꾸 늦추지 말고, 그래서 좀 본보기를 보여야지, 교류·협력분과위에서...

북(김정우) : 아니 글썄 임선생, 내 말 들으라니까요. 이제 아마 무슨 회담이 또 열리게 되면 그 날짜가 무엇이 정해지는가 알겠는데... 그래서 8월 5일부터 4, 5, 6 사이에는 날짜가 있으니까 건너서 8, 9, 10 중에서 마음대로 잡으시죠.

남(임동원) : 8일은 토요일인데, 또 일요일도 좋다 이거로구만.

북(김정우) : 통일을 위해서는 일요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남(임동원) : 높이 평가합니다.

남·북(일동) : (웃음)...

북(김정우) : 10일날 하지요, 뭐. 일요일날 안하겠으면 10일로 합시다.

남(임동원) : 아니 그렇게 한 주를 넘겨 댈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또...

북(김정우) : 우리 한달 후에 만나도 얼마나 좋은 수정안이 나왔어? 그쪽에서 10일 후에 우리가 오늘 내놓은 수정안만큼만 들고 나오라구요.

남(임동원) : 그 다음주는 8.15가 또 겹쳐져 있고, 이거 아무래도 위원접촉 손선생 몇번 하면 다 끝날 것 같오?

북(손종철) : 그건 그저 귀측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놓은 합의서만큼 그쪽에서 또...

남(임동원) : 명문우답이로구만.

남·북(일동) : (웃음)...

남(임동원) : 질문은 멋있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아마 몇번 해야 되지 않아요?

북(김정우) : 위원접촉 한 두번 하고 그 다음 잘 안되면 위원장접촉 합시다.

남(임동원) : 접촉 두번, 그러면 바쁠텐데... 내주 합시다. 내주 6일날 합시다.

북(김정우) : 아, 그날 뭐 있다니까 그래. 통일원에서 뭐 다 아직 집계 안됐구만. 뭐 있어요, 우리 계획에 의하면(웃음)...

남(임동원) : 그러면 8일날 괜찮겠습니까?

북(김정우) : 토요일날? 토요일날 뭘 하겠어요?

남(박운서) : 토요일, 일요일 뭐 내리 이틀 하지.

남(임동원) : 그러면 귀측이 8월 8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8월 8일에 합시다. 8뎡도 좋네, 8. 8...

북(김정우) : 10일날 해요, 10일날.

남(임동원) : 왜 또... 8, 9, 10 좋다고 그래 놓고 왜 또 10일로 가? 내주 내로 하는 거예요, 내주 내로... 8월 8일날 합시다.

북(김정우) : 8월 8일날은 그저 좀 준비가 안될 것 같아요.

남(임동원) : 뭐가, 다 되어 있는데...

북(김정우) : 아니 그쪽에서 우리 것 다 몽땅 합의해 가지고 나온다면 좋고... 그래서 10일날 합시다. 9일날 아니면 10일날, 10일날 해요.

남(임동원) : 그런데 우리 김선생이 한번 얘기했던 것은 그대로 이러쿵 저러쿵 변경 안하는데, 오늘 8일도 좋다고 그래 놓고 즉각 변동한다는 것은 좀...

북(김정우) : 나는 또 8일부터 10일사이에 쫓으라고 했더니 진짜 8일 쫓
는구만(웃음)...

남(임동원) : 아니, 그러면 9일이 일요일인데, 8일날 합시다.

북(김정우) : 10일날 하자구. 내가 10일날 딱 해야 될 일이 있어. 10일날
합시다.

남(임동원) : 위원장이 나올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북(김정우) : 아니 내가 또 그래도 다 좀 지휘해 줘야지.

남(임동원) : 한쪽이 그날 안한다면 혼자 나와서 회의가 성립이 안되겠
지?

북(김정우) : 그렇게 하고 위원 3명, 그 다음에 수원 3명, 회의장소는 중
립국회의실.

남(임동원) : 중립국회의실 월요일날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네. 오늘이 화
요일이지, 좋습니다.

북(김정우) : 그렇게 합시다.

남(임동원)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록 목적상 한 말씀 드릴 것은...

북(김정우) : 그건 또 어디서 들어온 쪽지를 또 읽습니까?

남(임동원) : 오늘 우리 김령성위원 여기 같이 합류하게 된 데 대해서 대
단히 환영합니다.

북(김령성) : 감사합니다.

남(임동원) : 기록 목적상 분명히 얘기해 두는데, 그런데 사전 통보 없이
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북(김정우) : 어제 통보를 했다는데...

남(임동원) : 지난번에 우리가 저 누가 하루 좀 결석을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내가 대단히 받았는데, 오늘 거 신세를 갚겠어요(웃음). 됐습니까?

북(김정우) : 임위원장선생, 계산은 명백히 하는구만. 거 잊어먹었다 누가 쪽지 들여 보내니까 또 한 마디 하고(웃음)... 그런데, 어제 연락했다는 데...

북(김령성) : 임위원장이 제가 여기온 데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임동원) : 아니에요. 나는 오늘 김위원이...

북(김정우) : 그만합시다.

북(김령성) :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걸로 봐서는...

남(임동원) : 자, 오늘 그래도 많이 진전이 됐어요. 잘 됐어요.

남·북(일동)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雙方 委員 人事 交換 後 退場>